

## 코로나19대응 시리즈

# 코로나19에 따른 농업·농촌분야 접근관점의 변화와 대응방향

강마야(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kmaya@cni.re.kr)

김기흥(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책임연구원, kimkh@cni.re.kr)

이도경(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원, lg6678@cni.re.kr)

이번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동안 농업·농촌 분야가 접근하던 관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충남 농정의 핵심적인 대응방향과 정책을 제안함에 주요 목적이 있음.

### CONTENTS

- 1. 서론
  - 2.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 대응현황
  - 3. 충청남도민패널 심층 설문조사 결과
  - 4. 접근관점의 변화와 대응방향
  - 5. 충청남도 농정 추진기반 혁신
  - 6. 결론
- 참고문헌  
부록. 심층 설문조사지

### 요약

-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 대응현황은 다음과 같음.
  - 포스트 코로나19를 고려한다면, 현재까지는 근본적 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일시적, 한시적인 긴급지원 중심의 대책수준임. 농업·농촌 분야도 새로운 변화 요구에 맞는 근본적인 대응방향 도출이 필요함.
- 충청남도민패널 심층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근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농산물 유통, 가격을 비롯하여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과 “충남 지역먹거리 선순환구축을 위한 정책”이라고 응답함.
  - 농정이 핵심적으로 변해야 할 것은 “지속가능한 농정 정책으로 변화, 과감한 행정 혁신 지향, 사회적 약자(소농) 보호 및 생활안정 지향, 민관 거버넌스 확대 순”으로 응답함.
- 새로운 접근관점의 변화와 5대 대응방향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일시적, 한시적 긴급대책이 아닌 새로운 정상(New Normal)을 향한 농정 전환과 사람중심 관점으로, 돌봄과 포용 관점으로, 환경과 생태의 관점으로 농정 변화 필요함.
  - 먹거리 선순환, 농업인력, 소득 및 경영안정, 환경친화, 통합돌봄 등 대응방향 키워드를 도출함.
  - ① 충남 지역먹거리 선순환구축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 민관협치 및 컨트롤타워 구성과 운영 등을, ② 충남 농업·농촌 사람과 인력 해결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 농업노동의 소중함에 대한 인정과 배려 등을, ③ 충남 농산물 유통·가격·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위해서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의 가격안정제 등을, ④ 충남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 이행하는 정책을 위해서 저비용·저투입 농법 전환 등을, ⑤ 충남 농촌거주 사회적 취약계층 통합돌봄 정책을 위해서 지역수요 맞춤형 돌봄 등을 제안함.
- 충청남도 농정 추진기반 혁신을 위한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음.
  - 농정조직의 혁신, 농정예산의 혁신, 농정정보의 혁신, 농정주체 인식의 혁신이 필요함.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음.



# 01 서론

##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한 기존 생활패턴은 또 다른 새로운 정상(New Normal)현상으로 발현, 분야별 관점의 전환과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임.
- 이미 정부 차원에서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로 대변되는 사회대협약(New Deal) 시대를 준비하고 있음.
- 코로나19가 일으킨 새로운 정상시대, 사회대협약 시대는 나비효과가 되어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이면서 고질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대두됨.
- 타 분야에 비해서 농업.농촌 분야는 대규모 피해보다는 오히려 ‘먹거리와 농촌환경’이라는 공공재로서 중요한 재화임을 각인하는 계기가 됨. 반면, 불편한 진실로 인해 가려졌던 쟁점사항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제 의제들을 꺼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 연구의 목적

-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동안 농업.농촌 분야가 접근하던 관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충남 농정의 핵심적인 대응방향과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 ● 연구의 내용

### - 연구내용 1 : 접근관점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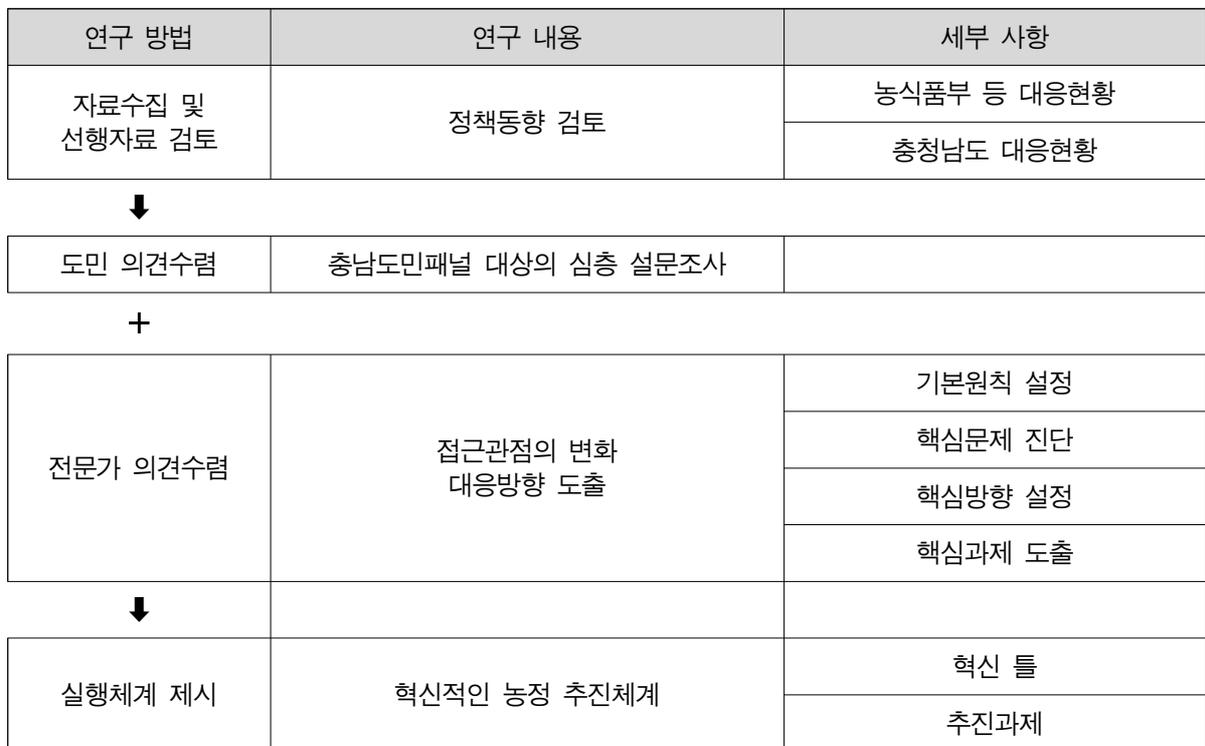
- 농업.농촌 분야는 수혜받던 수동적 존재에서 수혜를 돌려주는 능동적 존재 관점으로 변화
- ‘먹거리, 농촌환경’재화가 필수 공공재로서 이를 제공하는 주체관점으로 변화
- 질병 재난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선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농촌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중요성 관점으로 전환

### - 연구내용 2 : 핵심적인 대응방향과 정책

- 식량자급률 유지와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먹거리)
- 농업의 환경친화적 방식 이행체계 구축(농촌환경)
-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과 농업인력(소득과 인력)
- 농업·농촌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돌봄공동체 구축(농촌돌봄)

● 연구의 방법(〈그림 1-1〉 참고)

- 정책동향 검토, 심층 설문조사, 접근관점의 변화 및 대응방향 도출 순으로 구성함.
- 연구의 방법은 자료수집 및 선행자료 검토, 도민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수렴, 실행체계 제시 등을 수행함.



〈그림 1-1〉 연구의 내용과 방법

주 : 저자 작성함.

● 연구의 기대효과 및 정책활용

- 코로나19이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시기에 충남 농정분야의 중장기 대책 수립 활용
- 새로운 사회계약(New Deal) 전환에 대비하여 농업·농촌 분야가 선제적인 준비 가능
- 농업·농촌 분야의 근본적인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계기 모색
- 근본적인 과제 해결을 위해서 논의테이블에서 꺼내볼 수 있는 발제 근거자료 활용

## 02

#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 대응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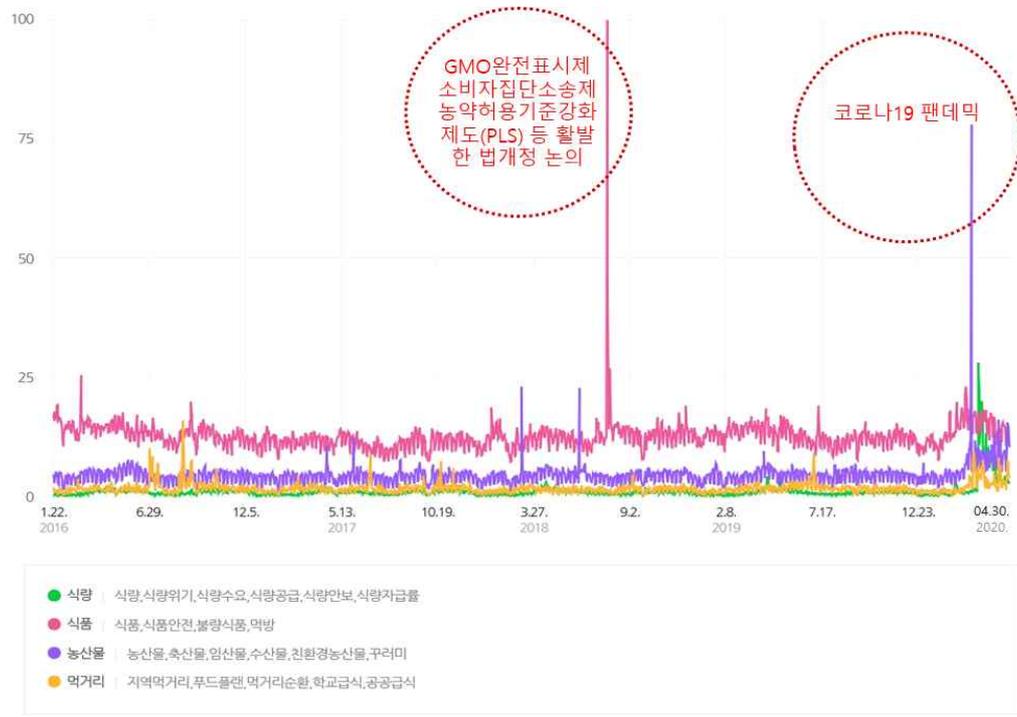
### 1. 국내외 여건변화<sup>1)</sup>

- 국가 전체적으로 낮은 식량자급률로 인하여 식량안보(food security) 위기,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먹거리 위기 경험
  - 국가 전체적으로 쌀 외에 대부분 품목은 낮은 식량자급률 수준(두류, 맥류, 잡곡류 등)을 보임.
  - 해외로부터 수출 금지 혹은 가격 상승 시 낮은 식량자급률 국가는 식량위기에 노출됨.
  - 해외발 식량파동 발생 시 중장기 농산물 가격 상승 직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위기를 느낌.
- 생산자 입장에서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고용인력 부족은 농가의 소득 및 경영 불안정 구조로 연계
  - 해외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의존도가 높은(특히 가축사료인 옥수수, 대두 등) 우리나라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 직면할 것으로 예상, 농가소득 및 경영구조의 불안정성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포기, 시기연기 등으로 농촌인력부족 발생, 국내 인력 고용으로 노임비 증가 등 생산비, 경영비 압박 가중되고 있음.
-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근본해결로 대두됨에 따라서 먹거리 중요성 인식

1) 자료 :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코로나19대응 연구추진단(2020), 코로나19 대응 시리즈 : “Bounce-Back 충남”을 위한 분야별 대응방안 모색, 충남리포트 제353호, 충남연구원.

주 : 이 글로부터 강마야가 작성한 “농업”부문을 재인용함.

- 감염병이 장기화되고 빈번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서 모두가 평상 시 자기면역력 향상시키는 것이 근본 해결책,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일들이 중요해짐.
  - 평상 시 면역력 향상과 관련된,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건강기능성 식품, 건강기능보조식품 수요 증가, 먹거리 중요성에 대해서 날로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됨.
- 전체적으로 농업·농촌의 근본체질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공감대 형성 계기로 작용
    - 일회성 감염병이 아니라 주기적, 장기적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일회성 팔아주기, 착한 소비 운동’과 같은 일회성, 시혜성 대책이 아닌 농업·농촌 근본체질 변화를 요구함.
    - 물리적 거리두기, 비대면 활동이 많아질수록 의식주 중요, 그 중 먹거리(食) 중요성이 날로 강조됨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공감대 형성 계기가 되었음.
- 근거로서 최근 식량, 식품, 농산물, 먹거리 검색어 급상승 추이(〈그림 2-1〉 참고)
    - 2016년부터 2020년 4월 현재까지 “식량, 식품, 농산물, 먹거리” 등으로 단어를 검색한 트렌드 분석 결과, “식품”이란 단어가 이 중에서 상위를 차지함.
    - 2018년 중반, GMO완전표시제, 소비자집단소송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등 법률 개정 및 제도 시행을 앞두고서 논란이 많았던 시기로서 “식품” 단어의 검색 조회수가 높게 나왔음.
    - 2020년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식량위기, 식량안보 등 우려가 높아지면서 “농산물” 단어의 검색 조회수가 높게 나왔음.



〈그림 2-1〉 검색어 트렌드 분석(2016.01.~2020.04.)

출처 : NAVER DataLab(검색일자 : 2020.05.01.)

([https://datalab.naver.com/keyword/trendResult.naver?hashKey=N\\_6d0f37239efe09fd1c7a50cdd0e6e652](https://datalab.naver.com/keyword/trendResult.naver?hashKey=N_6d0f37239efe09fd1c7a50cdd0e6e652))

## 2. 중앙정부 대응현황

-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주로 수출진흥, 친환경농업, 재해보험 정책, 농업금융정책 등의 영역에서 긴급대책 마련(〈표 2-1〉 참고)
  - 2월부터 5월까지 긴급대책의 주요 내용은 농식품 수출 지원 및 수출시장 개척, 재정지원 확대,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 지원, 농업인과 벤처육성기업 대상 경영자금 및 정책자금 융자 지원, 농기계 임대료 감면, 착한소비 지원, 비대면 마케팅, 인력부족을 위한 중개시스템 구축 등을 마련함.
  -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19를 고려한다면, 현재까지는 근본적 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일시적, 한시적인 긴급지원 중심의 대책수준임.
  - 다만, 청와대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19 농정분야 TF 구성, 향후 발표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표 2-1〉 코로나19에 따른 농식품부의 대응 현황(2월~5월)

구분	영역	주요 내용	비고사항
2020.02.26.	수출진흥	코로나19 대응, 농식품 수출 총력 지원	-원료구매자금(3,680억원, 금리 0.5%p 인하), 판촉·마케팅(123.8억원) 긴급 지원 -농식품 수출업계의 금융·물류, 판매 애로 해소와 신규 수요 발굴 등
2020.03.05.	기획재정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농식품분야 재정지원 확대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이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83억원 추가 지원(① 화훼 소비 촉진, ② 식품·외식업체 지원, ③ 농식품 수출지원)
2020.03.09.	친환경농업	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 지원	-생협, 유통업체, 농협 등 판촉 행사 개최 -중앙·지방 공무원 및 농업관련기관 대상 코로나 피해 농가 친환경농산물 공동구매 캠페인 추진
2020.03.17.	재해보험정책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대상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 융자 지원	-코로나19 감염 여파 및 농작업 보조인력 구인난 등 정상 경영활동이 어려운 농가 등 대상
2020.03.30.	경영인력	농번기 인력 수급 지원 방안 마련	-방문동거(F-1)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추진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30개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추가 지원 -시·군별 농업인력지원상황실 설치운영으로 인력 공급 상황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2020.04.01.	농기자재정책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감면	-농번기(4~7월) 동안 농기계 임대료 일 5천 원~105천 원 인하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141개 시·군구에 농번기(4~7월) 동안 농기계 임대료 50% 이내 감면 조치
2020.04.13.	친환경농업	코로나19로 판로 잃은 친환경농가를 돕는 '착한 소비' 적극	-6주간 피해 물량의 96%인 1,164톤 판매 지원 (꾸러미 공동구매, 농가 돕기 판촉행사, 지역별 판로지원, 자가격리자 구호꾸러미 공급 등)

구분	영역	주요 내용	비고사항
		지원	-지속적인 등교 중지예 대비해 4월 한 달간 친환경농산물 812톤의 소비 촉진 지속 지원 -공공급식·할인판매 참여 시 단가 차액(20% 내외) 지원(600톤) 및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동구매 캠페인 배송·포장비 지원(212톤)
2020.04.17.	재해보험정책 농업금융정책	코로나19 피해농가 정책자금 지원 강화	-244농가에 62억 원의 긴급자금 지원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농업인에 대한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2.5%→0%) 및 상환연기(1~2년) 추가 지원(6.1.) -농업종합자금 및 농업경영회생자금 관련 대출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농업인 등 금융부담 경감 지원
2020.04.23.	수출진흥	해외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등 비대면 마케팅	-한류연계 온라인콘서트, 동영상 마케팅, 왕홍 등 파워인플루언서 활용
2020.04.29.	식생활소비급식	바로마켓 승차구매형(드라이브 스루) 장터 운영	-과천 경마공원(한국마사회) 주차장 -규모 : 60여 농가 -품목 : 농가별 꾸러미 또는 단품(3종류)으로 구성
2020.05.06.	농산업정책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대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 2차 평가를 통해 2020년도 사업대상자 350개(명) 선정, 창업준비금 및 사업화자금 지원 -전국 7개 농식품벤처창업센터(A+센터)를 통한 창업 및 사업화 교육, 최신 창업 정보, 전문가 컨설팅 제공
2020.05.07.	운영지원 농업인력	농촌인구 과소화 및 농업인력 부족 대응	-5월~6월말까지 농식품부 소속·산하기관 본원(본사) 및 지원(지사)에서 약 3,000여명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농촌 일손돕기에 동참
2020.05.12.	혁신행정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농식품 분야 기업 및 국민의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한 적극행정	① 공공임대용 매입대상 농지 확대 ② 임대수탁 대상농지의 최소면적 제한 폐지 ③ 동·식물 검역증 사본을 한시적으로 인정 ④ 친환경농산물 인증자의 의무교육을 이수 조건으로 인증서 우선 발급 ⑤ 원산지표시 위반자의 의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이수 시한(3개월)을 한시적으로 유예 ⑥ 육묘업 등록 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⑦ 원산지표시 위반자의 의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이수 시한(3개월)을 한시적으로 유예
2020.05.19.	친환경농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 추가 확보·지원	-2020년도 시범사업 확대(4.5만 명 → 8만 명) 예산(45억 원) 국무회의 통과 추가 시범사업 지역 * 임산부에게 5월말부터 공급 시작
2020.05.25.	경영인력	도시 구직자와 구인농가 연결하는 온라인 「도시-농촌 인력중개 시스템」 구축	-농업 단기근로에 지원하는 구직자에게는 임금(농가에서 지급) 이외에도 교통·숙박·보험(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지급) 등 지원
2020.05.25.	수출진흥	해외 기능성식품 시장을 개척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기능성식품 수출지원단' 구성하여 단기적으로는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과학적 근거 마련과 정보조사

주 : 1. 각 시기별 보도자료는 참고문헌에 표시함.  
2. 저자 작성함.

●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녹색전환 전략구상 모색 준비

- 녹색전환 전략은 단순하게 환경부의 일반적인 환경정책을 넘어서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환경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임. 건물·교통·물류 등 녹색 기반시설(그린 인프라) 확대, 주민·지역이 참여하는 깨끗한 에너지 보급 촉진,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등을 포괄할 예정임.
- 주요 내용은 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에서 추진한 연구성과물을 공유하고 기반시설, 교통, 경제, 산업, 에너지, 농업 등 향후 정책연구 방향을 논의함.
- 향후 계획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의 저성장 등 시대(뉴노멀)에 대비하여 대규모 감염병, 기후변화 등 외부충격에 탄력적인 사회로의 유연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녹색경제 정책연구 포럼 운영, 녹색전환 전략을 구상할 계획임.

※ 참고 : 환경부의 녹색전환 전략구상을 위한 포럼 운영

□ 추진 배경

- 녹색전환 전략 마련 과정에서 정책연구기관·학계 차원의 연구성과를 정책전략에 적극 반영하고, 대외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플랫폼 필요
- 정책자문·확산기구로서 정책연구기관 중심의 녹색경제 정책 포럼 구성·운영 추진

□ 구성 및 기능

- (구성) 녹색전환 6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주관부처, 정책연구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유관분야를 통합 분과로 구성
- 산업계·NGO의 경우 별도 포럼을 운영(KBCSD, 민간환경정책협의회 등) 하되 대표성있는 기관·기업을 동 포럼에 참여시켜 포럼간 성과연계공유



- ※ 녹색전환 6대 분야: ① 기후-에너지, ② 그린인프라, ③ 교통, ④ 녹색산업, ⑤ 금융, ⑥ 농수산업·식품
- (기능) 국책연구기관이 학계와 함께 정책 공동개발 및 수시 발표 추진



□ 운영방식

- 월 1~2회 주제를 정하여 분과별 국책연구기관 등 전문가 발제 및 토론 진행, 해당 주제 관련 사업·정책 개발 토의

자료 : 환경부(2020.05.13.), 코로나19 이후 시대 대비, 녹색전환 전략 모색.

### 3. 충청남도 대응현황

● 충청남도는 2월부터 3월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농업분야 방역대책, 농업분야 피해대책, 수출 및 용자 지원, 특별지원 대책 등의 영역에서 긴급대책 마련 (<표 2-2> 참고)

- 2월부터 3월까지 긴급대책의 주요 내용은 각종 체험 및 휴양시설 방역, 외국인 근로자 방역, 친환경농산물 및 화훼 소비촉진, 일손지원, 경영자금 및 수출자금 지원, 농민수당 지급 등을 마련함.
-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19를 고려한다면, 중앙정부 대책수준과 마찬가지로 근본적 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일시적, 한시적인 긴급지원 중심의 대책으로 볼 수 있음.

<표 2-2> 코로나19에 따른 충청남도 농정의 긴급지원대책(2월~3월)

구분	주요 내용	비고사항
농업분야 방역대책	농촌관광, 휴양림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	- 방역소독, 손소독제, 근무자 마스크, 감염증 예방수칙 및 위생 관리 계도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모니터링	- 축산농가, APC 근로자 해외 출입상황 및 모니터링, 예방수칙 지도
	축산분야 방역물품 및 방역차량 긴급지원	- 동물위생시험소 보유 방역물품 긴급 지원(비상방역대책반)
농업분야 피해대책	화훼농가 꽃 소비 및 지원사업 조기집행	- 화훼산업육성사업 조기집행(22억원), 경영안정자금 안내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운동	-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61개소) 활용 판촉, 도시군, 교육청, 농협 소비 참여 - 개학이후 미처리 농산물이 우선 공급조리 되도록 교육청 등과 식단조정 협의
	농번기 3-4월 일손부족 농촌인력 지원	- 농작업지원단(54개소) 인력 알선, 농촌인력창구 조기 개설(4월→3월), 군부대유관기관단체 등 일손돕기 전개
	이상저온 피해농가 및 농번기(4~6월) 일손부족 농가 지원	- 농업인력지원 상황실 및 농촌일손돕기 알선창구 운영(376개소) - 영농작업반 및 道 자체 농작업지원단 확대 운영(58개소) - 일자리지원센터(15개소), 자원봉사자(21만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213명) 연계
수출 및 용자 지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 수출 피해품목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 : 34억원 - 농식품부, 지자체 표준 수출물류비 지원 한도(現 15%) 상향 검토 중
	코로나 19 피해 농업인 경영자금 지원(농업용자금 이차보전)	- 道 ‘농어촌진흥기금(257억)’, 농식품부 ‘재해대책경영자금(72억)’ 용자 및 이차보전
특별지원 대책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조기집행 추진	- 165천 가구(농가150,임가5,어가10), 농가당 80만원/년, 총1,320억원 - 집행시기 : 10월→5월(1차 45만원 집행, 추경 확보 후 2차 지급)
	농어촌진흥기금(이차보전) 경영안정자금 지원	- 영세소농, 여성·청년농업인 등 경영안정자금 우선지원

자료 : 충청남도 농림축산국(2020), 코로나19관련 농업농촌분야 긴급지원대책, 내부자료(2020.03.19.).

주 : 저자 작성함.

- 충청남도는 4월부터 5월까지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한다는 방침(〈표 2-3〉 참고)
  - 단기에는 농식품 소비판촉, 농촌인력 지원, 농어민수당 조기 집행, 농촌 경영안정 자금 지원, 농식품 해외마케팅 추진을 계획함.
  - 중장기에는 미래식량안보 대비 및 식량주권 회복, 언택트(Untact) 시대 대응한 농식품 유통체계 개편,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춘 미래농업 경쟁력 강화, 안심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조성을 계획함.

〈표 2-3〉 포스트 코로나19에 따른 충청남도 농정의 대응추진계획(4월~5월)

구분	정책 방향	주요 내용
단기	농식품 소비판촉	학교급식용 농산물 판매 등 온·오프라인 판촉 확대
	농촌인력 지원	이상저온 피해농가 및 농번기 일손부족 농가 지원
	농어민수당 등 조기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지원 위해 소득보전수당 조기 집행
	농촌 경영안정 자금 지원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강화
	농식품 해외마케팅 추진	딸기 수출기반 조성 및 해외마케팅 강화 인삼, 6차산업제품 등 지역생산 가공식품의 해외마케팅 확대
중장기	미래식량안보 대비 및 식량주권 회복	식량작물 생산체계 구축
		우량농지 확보 및 보전대책 추진
		농촌인력부족 해소대책 마련
		원예농산물 수급안정 추진
	언택트(Untact) 시대 대응한 농식품 유통체계 개편	총산총소(忠産忠消)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온라인 쇼핑몰 등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드라이브-스루 방식 판매 추진
		신남방·신북방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춘 미래농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 원예농업 확대 및 ICT 축산시스템 구축
		소비트랜드 변화 대응, 식품산업 육성
	안심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조성	농업유산자원 연계, 도농교류 활성화
		공익형직불금 체계 구축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가뭄대비 농업용수 공급대책 마련		
경제·환경을 고려한 임산업 발전기반 구축과 녹지공간 확충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		

자료 : 충청남도(2020), 「Post 코로나19 대응」 제3차 비상경제상황 점검회의(2020.05.07.)

주 : 저자 작성함.

## 4. 요약 및 시사점

### ● 국내외 여건변화

- 국가 전체적으로 낮은 식량자급률로 인하여 식량안보(food security) 위기,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먹거리 위기를 경험하고 있음.
- 생산자 입장에서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고용인력 부족은 농가의 소득 및 경영 불안정 구조로 연계,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근본해결로 대두됨에 따라서 먹거리 중요성을 인식하는 중
- 전체적으로 농업·농촌의 근본체질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공감대 형성 계기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한 근거로서 최근 식량, 식품, 농산물, 먹거리 검색어 급상승 추이를 보임.

### ● 중앙정부 대응현황

-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로 수출진흥, 친환경농업, 재해보험정책, 농업금융정책 등의 영역에서 긴급대책을 마련하였지만 포스트 코로나19를 고려한다면, 현재까지는 근본적 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일시적, 한시적인 긴급지원 중심의 대책수준임.

### ● 충청남도 대응현황

- 충청남도는 2월부터 3월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농업분야 방역대책, 농업분야 피해대책, 수출 및 용자 지원, 특별지원 대책 등의 영역에서 긴급대책 마련하였고 4월부터 5월까지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함.
- 단기에는 농식품 소비판촉, 농촌인력 지원, 농어민수당 조기 집행, 농촌 경영안정 자금 지원, 농식품 해외마케팅 추진을 계획, 중장기에는 미래식량안보 대비 및 식량주권 회복, 언택트(Untact) 시대 대응한 농식품 유통체계 개편,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춘 미래농업 경쟁력 강화, 안심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조성을 계획함.

### ● 포스트 코로나19에 있어서 농업·농촌 분야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 대응 필요

- 전 세계적으로 이미 저성장시대에 돌입,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사회현상에 대한 재점검과 검토의 시기를 맞이하여 이제 농업·농촌 분야도 새로운 정상(New Normal)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외면했던 농정개혁의 요구와 함께 근본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새로운 접근관점의 변화, 대응방향 도출을 요구받고 있기에 현재와 같은 임시방편 수준의 긴급지원대책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03

## 충남도민패널 심층 설문조사 결과

### 1. 조사개요

- 조사명 : 포스트 코로나19에 따른 농업·농촌 분야 심층 설문조사
- 조사목적 :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농업·농촌 정책의 전환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조사기간 : 2020년 4월 28일~5월 10일
- 조사공간 : 충청남도 일원
- 조사내용 :
  - 타 분야와의 비교, 농업·농촌 분야의 긍정과 부정 현상, 현재와 미래 중요도, 공익적 기능, 근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우선순위, 정책별 실행사항(\* 설문지 부록 참고)
- 조사대상 : 충청남도 도민참여단(충남도민패널) 대상 30여명 배부, 24명 회신
  - 정주환경·인프라분과, 농어업·농어촌분과, 경제·일자리분과, 문화·관광분과, 복지·안전분과, 환경·에너지분과, 청소년계획단 등 충남도민패널 총 116명
  - 이 중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지역별, 참여분과별, 성별, 연령별 고른 배분을 통해서 총 30여명 선정, 단, 농업인과 비농업인 비율을 50:50으로 배분
- 조사방법
  - 서면 심층설문조사(유선으로 사전안내, 이메일 등 통신으로 조사지 배포 및 회신)
  - 심층 설문조사이니만큼 객관식 설문보다 주관식 설문에 초점
  - 주관식 설문조사 결과는 지면 제약으로 인하여 간단한 분석결과만 소개
- 분석도구
  - SPSS Statistics ver 24.0, R-Rrogramming package ver 4.0. 등의 분석도구 사용

## 2. 결과분석

### ● 기초 현황분석(〈표 3-1〉 참고)

- 응답자 24명 중 거주지역은 예산군, 부여군, 공주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순임.
- 응답자 24명 중 농어업·농어촌 분과는 8명, 그 다음으로 경제·일자리 분과는 5명, 복지·안전 분과는 4명 순임.
- 응답자 24명 중 40대는 7명, 60대는 6명, 30대는 4명, 50대는 3명 순임.

〈표 3-1〉 응답자 속성별 기초 현황분석

시군	응답자수	참여분과	응답자수	연령	응답자수
계룡	1	경제·일자리	5	10대	2
공주	2	농어업·농어촌	8	20대	2
금산	1	문화·관광	2	30대	4
당진	2	복지·안전	4	40대	7
보령	2	정주환경·인프라	2	50대	3
부여	3	청소년계획단	2	60대	6
서산	1	환경·에너지	1	총합계	24
서천	2	총합계	24		
아산	1				
예산	4				
청양	2				
태안	1				
홍성	2				
총합계	24				

주 : 저자 작성함(이하 3장의 모든 표와 그림은 동일하므로 생략).

● 1.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충남 내 기회와 위기에 놓인 직종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충남 내 기회인 직종은 1순위가 농림어업 관련직, 2순위는 서비스 등 자영업 관련직(외식업·관광업), 3순위는 영업 및 판매 관련직 순으로 나타남 (<표 3-2> 참고).

<표 3-2> 코로나19로 인한 충남 내 기회인 직종(중복응답 포함)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합계
	농림어업 관련직 (식품가공물 류 포함)	서비스 등 자영업 관련직(외식 업·관광업)	영업 및 판매 관련직	문화예술디 자인 방송 관련직	건설·기계·재 료·화학·섬유 전기전자통 신 관련직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그 외 특수고용직· 계약직·일용 직 등	
1순위	16	1	1		5	1		24
2순위	5	5	5	4	3		2	24
3순위	0	0	9	5	1	8	1	24
합계	21	6	15	9	9	9	3	72
비중	29.2%	8.3%	20.8%	12.5%	12.5%	12.5%	4.2%	100.0%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충남 내 위기인 직종은 1순위가 서비스 등 자영업 관련직 (외식업, 관광업), 2순위는 영업 및 판매 관련직, 3순위는 그 외 특수고용직·계약직·일용직 등 순으로 나타남(<표 3-3> 참고).

<표 3-3> 코로나19로 인한 충남 내 위기인 직종(중복응답 포함)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합계
	농림어업 관련직 (식품가공물 류 포함)	서비스 등 자영업 관련직(외식 업·관광업)	영업 및 판매 관련직	문화예술디 자인 방송 관련직	건설·기계·재 료·화학·섬유 전기전자통 신 관련직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그 외 특수고용직· 계약직·일용 직 등	
1순위	1	18		1			4	24
2순위	2	3	11	3	1	2	2	24
3순위	0	0	5	7	2	2	8	24
합계	3	21	16	11	3	4	14	72
비중	4.2%	29.2%	22.2%	15.3%	4.2%	5.6%	19.4%	100.0%

● 2.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충남의 농업·농촌 분야가 처한 긍정적인 현상과 이미지(<그림 3-1> 참고)

- 충남의 농업·농촌 분야를 연상하면 떠오르는 긍정적인 현상과 이미지에 대해서 식품안전성 관심 고조·안전한 먹거리·식품위생 등 먹거리와 관련한 언급이 11건(17.5%), 지역 일자리·관광(캠핑)·높은 고용안정성·빅데이터·AI·산업구조 다변화·건강과 의료 등 일자리와 관련한 언급이 11건(17.5%)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 충남 농업·농촌 분야의 긍정 현상과 이미지

구분	주요 내용	합계(건)	비중(%)
2-1. 긍정 현상, 이미지 (기회, 희망의 단어)	식품안전성 관심 고조, 안전한 먹거리, 식품위생 등	11	17.5%
	지역일자리, 관광(캠핑), 높은 고용안정성, 빅데이터, AI, 산업구조 다변화, 건강과 의료 등	11	17.5%
	농업, 우리농산물, 건강식품 등 관심 증가, 꾸러미, 특산품, 6차산업 확장 등	8	12.7%
	식량안보 중요성, 식량자급자족 관심 증가 등	8	12.7%
	먹거리 중요성, 농수산 식품 중요성 등	5	7.9%
	농산물 수입 감소, 로컬푸드 매장 이용 증가, 가정식 증가, 남북교류 확대 예상으로 수요 증폭 등	5	7.9%
	친환경농산물 관심과 수요 증가, 유통 활로 등	5	7.9%
	온라인 식품구매 증가, 온라인 유통구조 활성화, 농식품 배송 편리, 지역 내 먹거리유통 활성화 등	5	7.9%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 자연 중요성, 청정지역, 위생환경 개선, 전염병 예방 중요성 등	5	7.9%
	합계(중복 응답 포함)	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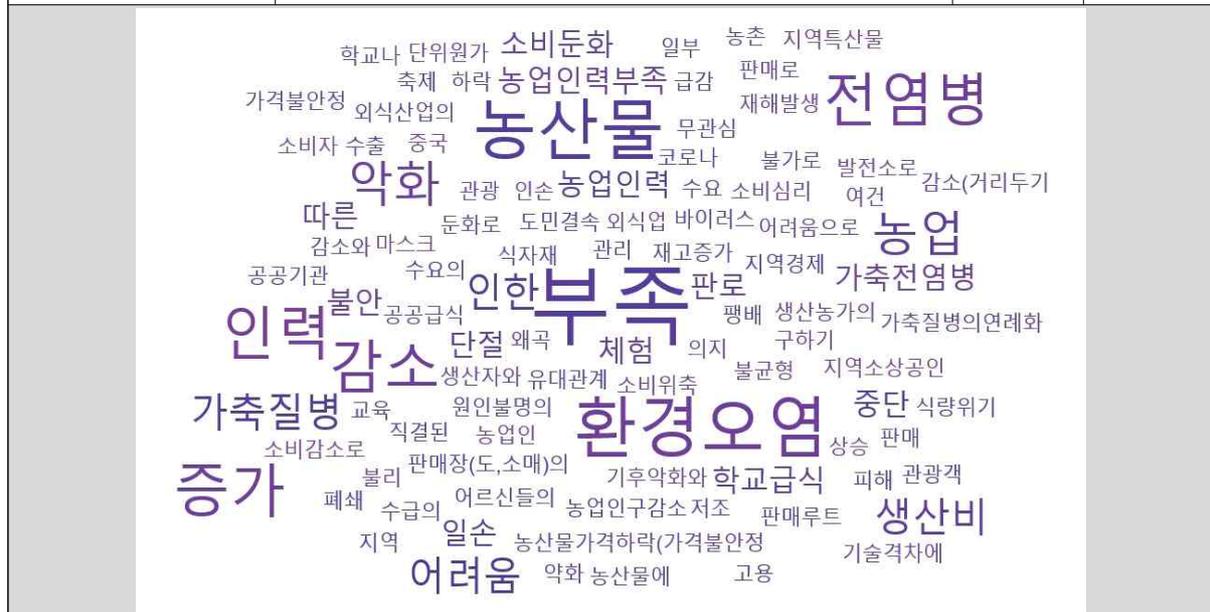


● 2.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충남의 농업·농촌 분야가 처한 부정적인 현상과 이미지(〈그림 3-2〉 참고)

- 충남의 농업·농촌 분야를 연상하면 떠오르는 부정적인 현상과 이미지에 대해서 농업인력 부족·농촌일손 부족 등 인력부족과 관련한 언급이 16건(21.1%), 지역축제 위축·체험 및 교육 중단·소비심리 위축·신선식품 수요 감소·친환경농산물 소비 둔화 등 수요 감축과 관련한 언급이 11건(14.5%)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 충남 농업·농촌 분야의 부정 현상과 이미지

구분	주요 내용	합계(건)	비중(%)
2-2. 부정 현상, 이미지 (위기, 절망의 단어)	농업인력 부족, 농촌일손 부족 등	16	21.1%
	지역축제 위축, 체험 및 교육 중단, 소비심리 위축, 신선식품 수요 감소, 친환경농산물 소비 둔화 등	11	14.5%
	바이러스, 원인불명, 환경오염 악화 등 환경문제	10	13.2%
	농산물 유통 경로 왜곡, 판매망 부족, 공급불안 등	8	10.5%
	가축질병 및 가축전염병 확산, 병해충 우려 등	8	10.5%
	농산물 가격불안정, 원가 및 생산비 상승, 소득불안정 등	8	10.5%
	농업인 간 기술격차에 따른 빈부격차, 관광객 감소, 지역발전 불균형, 도민결속 의지 약화, 사회적 유대관계 저하, 단체활동 감소, 포퓰리즘 팽배 등	8	10.5%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중단,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고리 단절, 중국산 농산물 범람, 관행농산물 불신, 식량위기 등	7	9.2%
	합계(중복 응답 포함)	76	100.0%



- 3.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충남 농업·농촌의 현재와 미래 중요도(〈표 3-4〉 참고)
  - 충남 농업·농촌의 현재와 미래 중요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 할 것이라는 응답이 75%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으로 높음.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중요”할 것이라는 응답도 16.7%를 차지함.
  - KREI에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 할 것이라는 응답이 농업인의 경우 62.2%, 도시민의 경우 73.1%로 높게 나옴.

〈표 3-4〉 충남 농업·농촌의 현재와 미래 중요도

구분	①	②	③	④	⑤	총합계 (명)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중요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것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덜 중요해질 것	모름. 상관없음.	
경제·일자리	5					5
농어업·농어촌	6	2				8
문화·관광	1	1				2
복지·안전	3		1			4
정주환경·인프라	1				1	2
청소년계획단	1	1				2
환경·에너지	1					1
총합계	18	4	1	-	1	24
(비중)	75.0%	16.7%	4.2%	-	4.2%	100.0%
*KREI 국민의식조사:농업인 (2019)	62.2%	19.1%	8.4%	9.7%	0.6%	100.0%
*KREI 국민의식조사:도시민 (2019)	73.1%	17.1%	3.7%	6.1%	-	100.0%

자료 : 이정민·우성희·이명기·박혜진(2019), 2019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KREI 농정포커스 제185호(2019.12.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에서 실시한 항목을 그대로 인용하였음.

- 4. 충남 농업·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공익적 기능(〈표 3-5〉 참고)
  - 충남 농업·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공익적 기능은 “식량(농식품, 먹거리)을 안정적으로 공급”이라는 응답이 75%를 차지, “자연환경·경관보전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라는 응답이 12.5%를 차지함.

〈표 3-5〉 충남 농업·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공익적 기능

구분	①	②	③	④	⑤	총합계 (명)
	식량(농식품, 먹거리)을 안정적으로 공급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문화 계승, 보존과 여가 향유에 기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	자연환경, 경관보전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경제·일자리	5					5
농어업·농어촌	8					8
문화·관광	2					2
복지·안전	1		1	2		4
정주환경·인프라	1		1			2
청소년계획단	1	1				2
환경·에너지				1		1
총합계	18	1	2	3		24
(비중)	75.0%	4.2%	8.3%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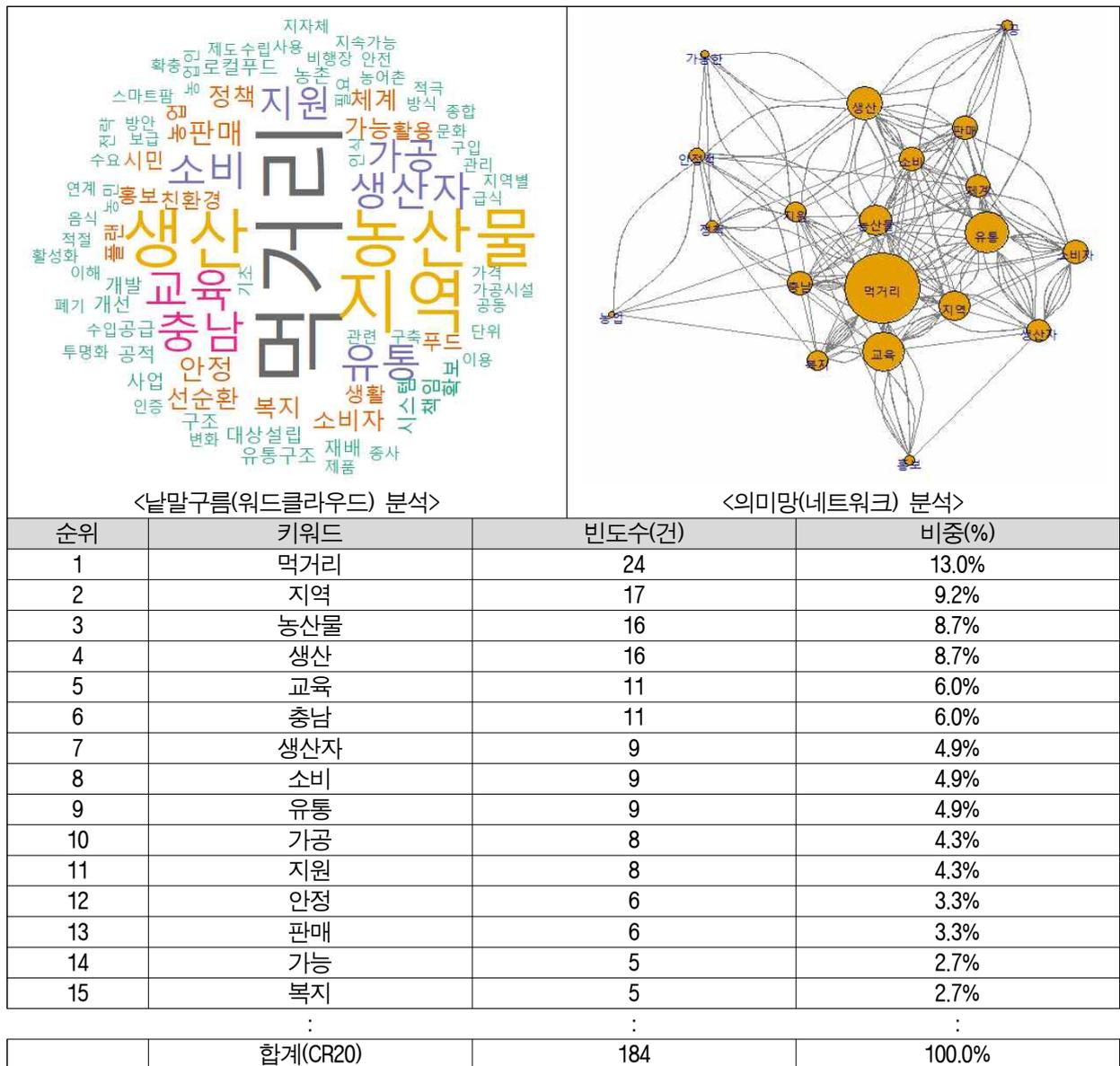
- 5.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충남 및 시군 농정이 가장 근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표 3-6〉 참고)
  - 충남 및 시군 농정이 가장 근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농산물 유통, 가격을 비롯하여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이라는 응답이 45.8%를 차지, “충남 지역먹거리 선순환구축을 위한 정책”이라는 응답이 29.2%를 차지함.

〈표 3-6〉 충남 및 시군 농정이 가장 근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총합계
	충남 지역먹거리 선순환구축을 위한 정책	농업·농촌 사람과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농산물 유통, 가격을 비롯하여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 이행하는 정책	농촌거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돌봄정책	
경제·일자리	1	1	2	1		5
농어업·농어촌	2		5		1	8
문화·관광			1		1	2
복지·안전	2	1	1			4
정주환경·인프라			1	1		2
청소년계획단	1		1			2
환경·에너지	1					1
총합계	7	2	11	2	2	24
(비중)	29.2%	8.3%	45.8%	8.3%	8.3%	100.0%

- 6.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충남 먹거리를 지역 내부에서 선순환(먹거리 생산-가공-유통-소비, 판매-폐기, 먹거리 교육과 먹거리 복지 등)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실행전략(<그림 3-3> 참고)
  - 충남 먹거리 선순환 구조 실행전략을 위해서 먹거리를 중심으로 생산은 물론 교육, 소비, 유통, 가공 등의 단어를 골고루 언급함.
  - 그림에도 불구하고 먹거리를 중심으로 먹거리 생산, 먹거리 유통, 먹거리 교육 등 이들 단어 간 상호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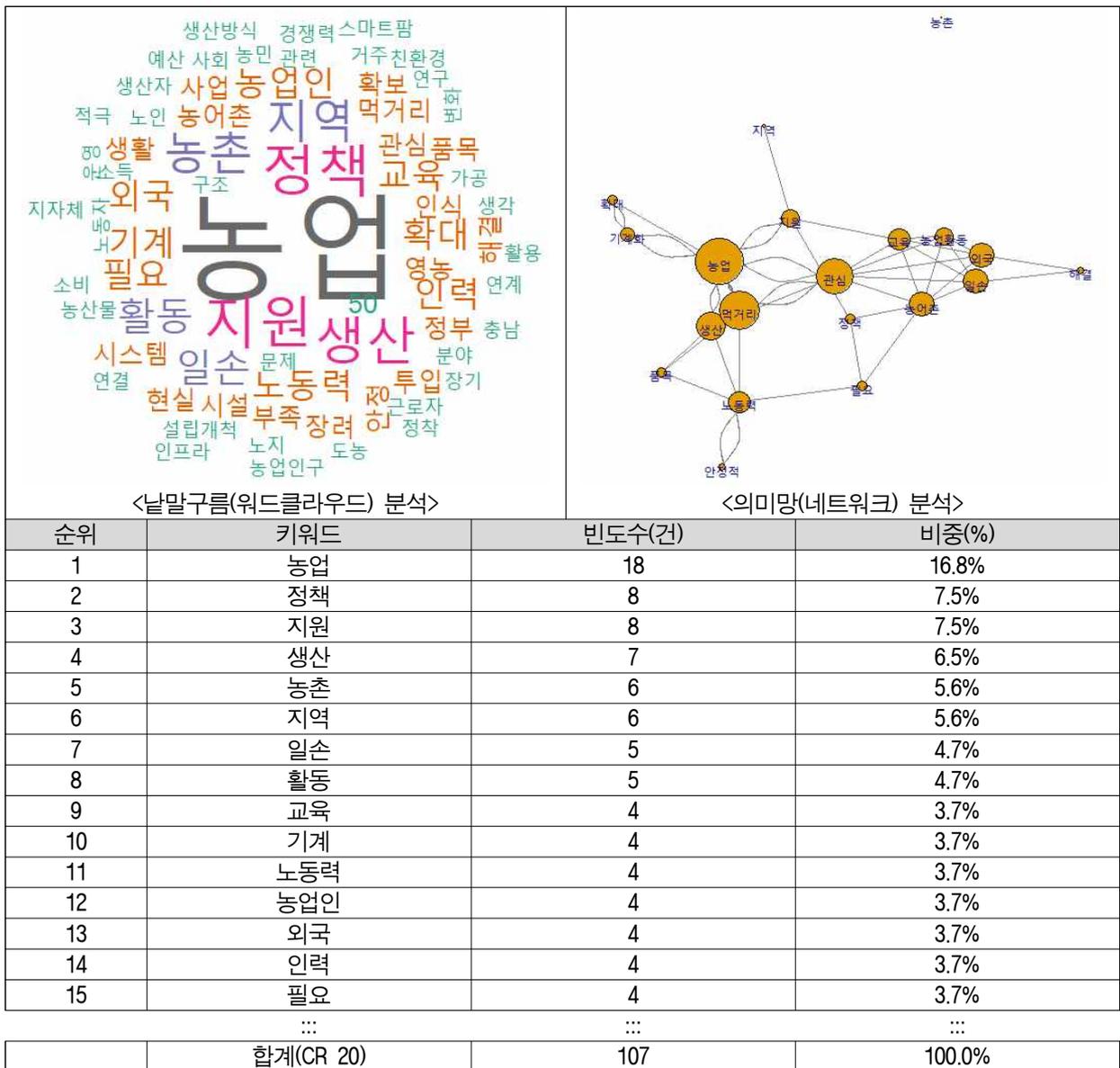
<그림 3-3> 충남 지역먹거리 선순환구축을 위한 실행전략 주관식 설문조사 분석결과



주 : R programming package를 이용하여 워드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함.

- 7.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충남 농업·농촌에 거주하는 사람과 농업활동을 하는 사람이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한 실행전략(〈그림 3-4〉 참고)
  - 충남 농업인력 해결전략으로서 농업정책 지원, 농촌지역 일손 확보, 교육 및 기계화 투자, 외국인인력 수급 등의 단어를 골고루 언급함.
  - 대체로 각 단어 간 연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응답자들도 별다른 대책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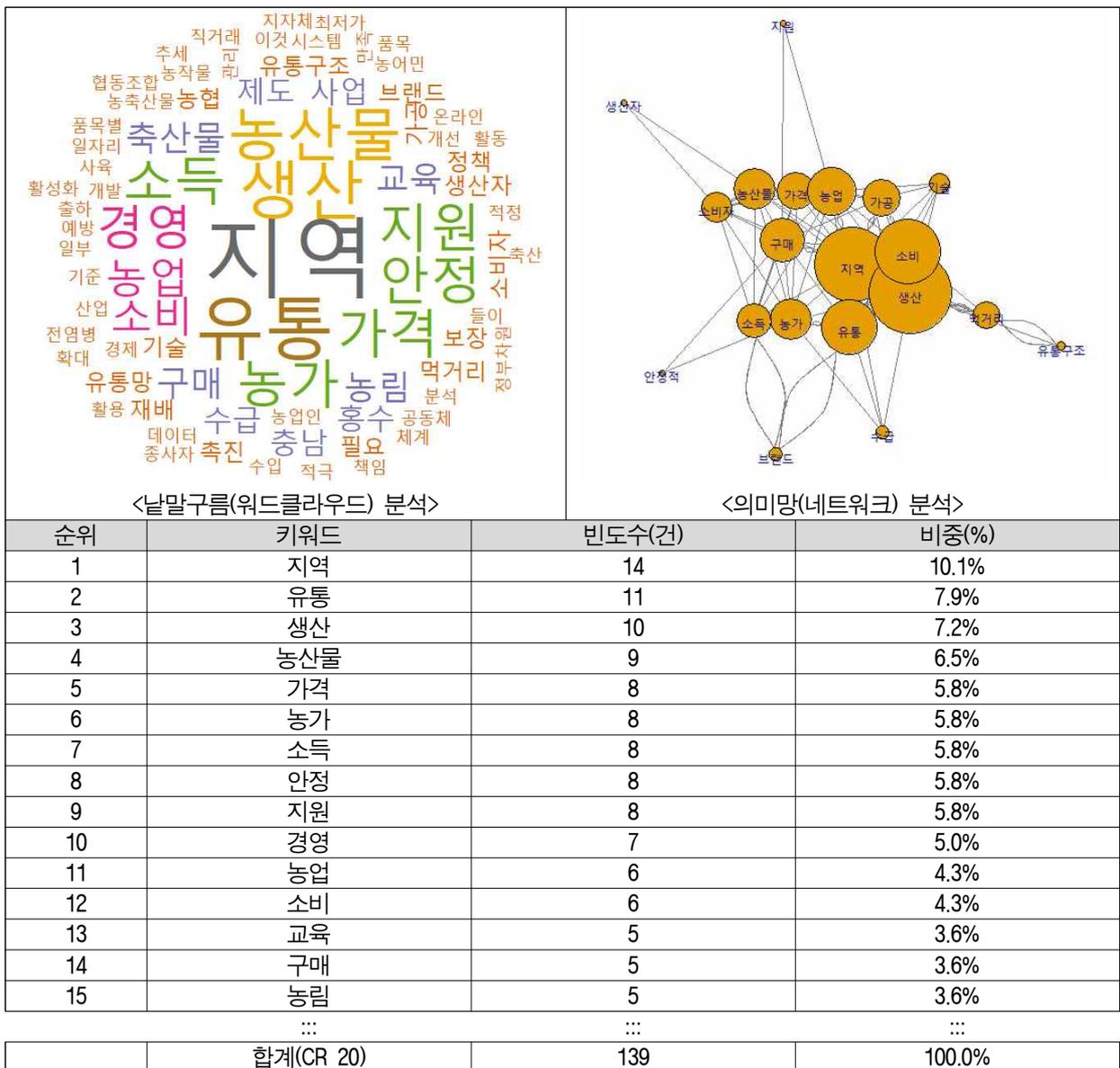
〈그림 3-4〉 충남 농업·농촌 사람과 인력 해결을 위한 실행전략 주관식 설문조사 분석결과



주 : R programming package를 이용하여 워드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함.

- 8.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충남 농림축산 물의 유통, 가격을 비롯하여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실행전략(<그림 3-5> 참고)
  - 충남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 전략을 위해서 지역 내 유통, 농산물 생산가격,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지원 등의 단어를 골고루 언급함.
  - 지역 내 생산과 소비, 유통 구조를 중심으로 가격을 형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상호 연관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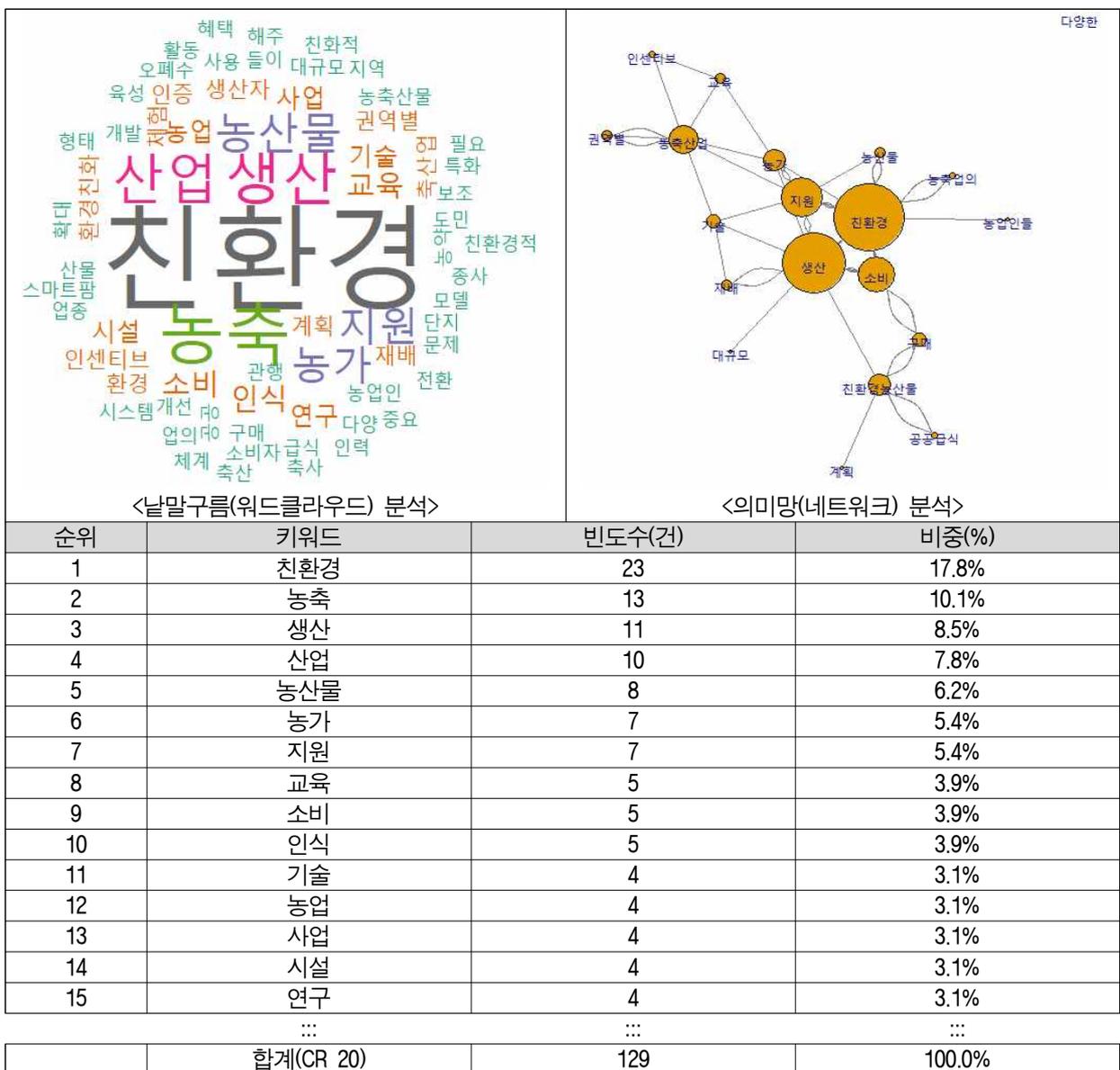
<그림 3-5> 충남 농산물 유통·가격·소득 및 경영안정 실행전략 주관식 설문조사 분석결과



주 : R programming package를 이용하여 워드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함.

- 9.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충남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행전략(<그림 3-6> 참고)
  - 충남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이행전략을 위해서 친환경 농축산업 생산, 농가지원, 교육, 소비자 인식, 기술개발, 시설기반 등 단어를 골고루 언급함.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중심으로 소비, 지원 등이 연관성이 있지만 대체로 각 단어 간 상호 연관성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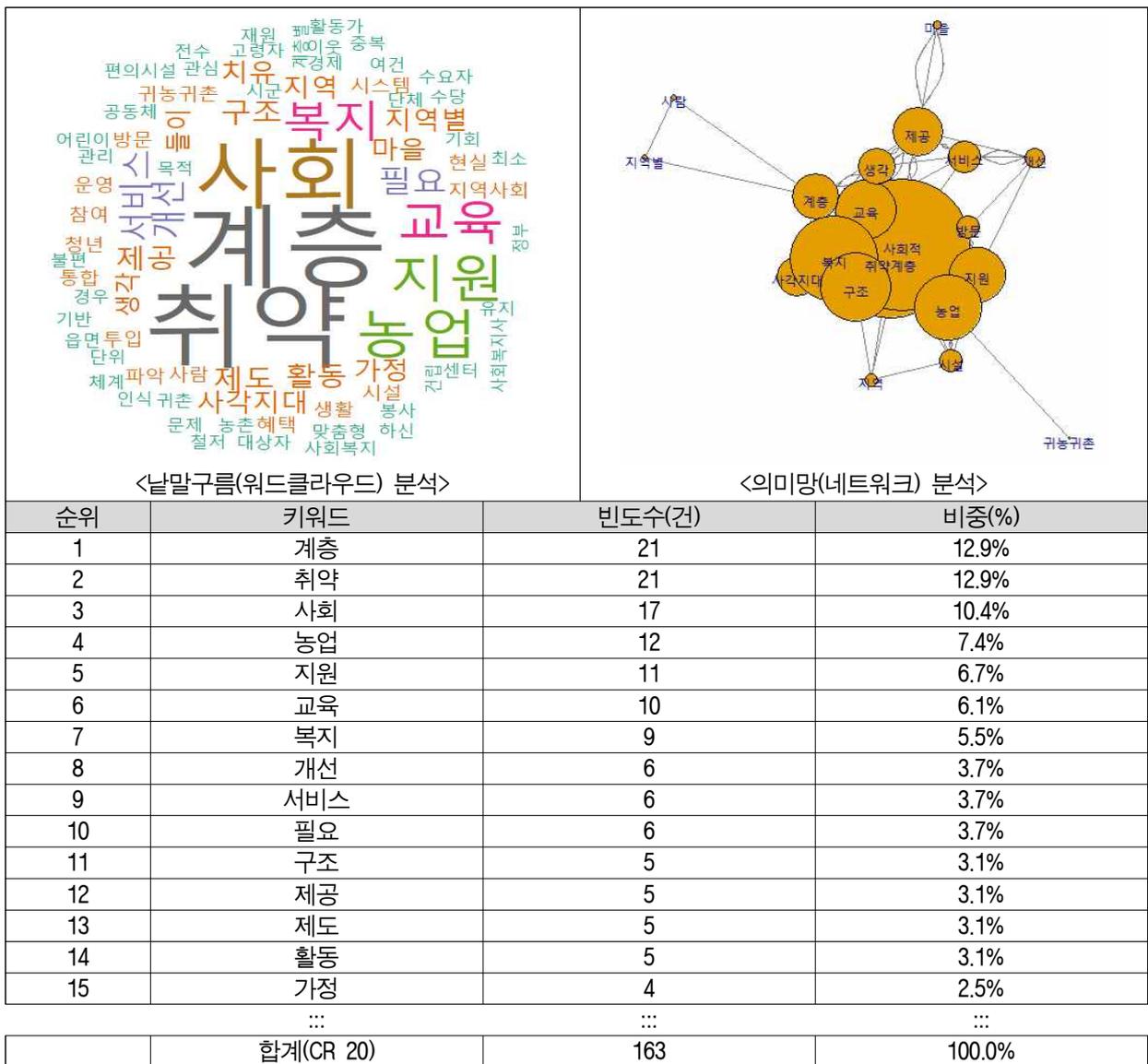
<그림 3-6> 충남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으로 이행하는 실행전략 주관식 설문조사 분석결과



주 : R programing package를 이용하여 워드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함.

- 10.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충남 농촌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sup>2)</sup>에 대한 통합돌봄을 위한 실행전략(<그림 3-7> 참고)
  - 충남 사회적 취약계층 통합돌봄 전략을 위해서 취약계층, 사회적 농업, 교육, 지원, 복지 서비스 개선 등의 단어를 골고루 언급함.
  -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업과의 연계, 복지구조 개편, 교육의 중요성, 사각지대 지원 시급 등 이들 단어 간 상호 연관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7> 충남 농촌거주 사회적 취약계층 통합돌봄 실행전략 주관식 설문조사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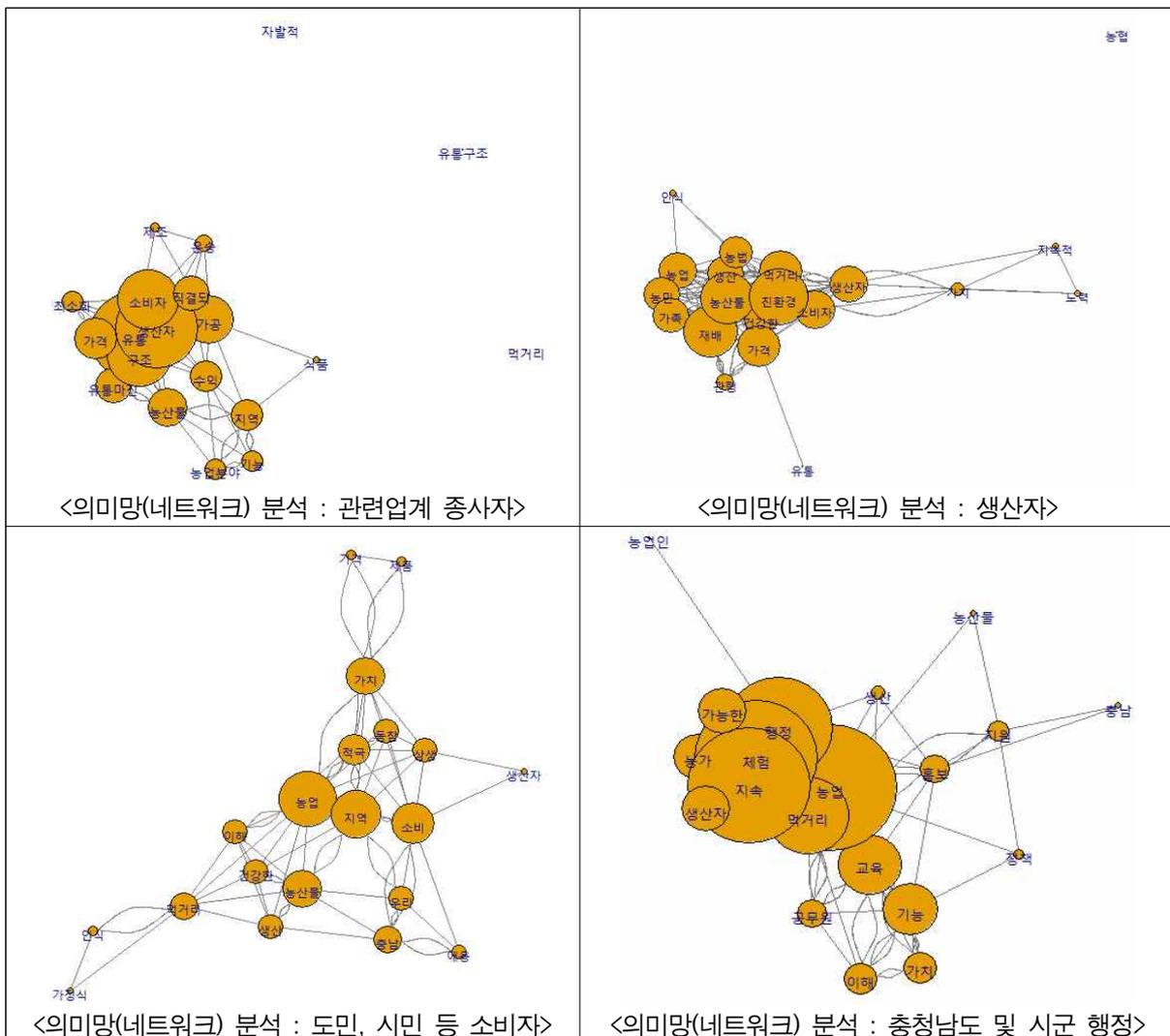
주 : R programming package를 이용하여 워드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함.

2) 주 :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약물중독자, 미혼모, 범죄피해 가족,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 주민, 저소득층)을 말하며,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범주에 있는 아동, 청소년, 여성, 귀농귀촌 희망자 등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11.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충남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충남도민들로부터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주체별 역할

-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관련업계 종사자는 유통구조 개선, 적절한 유통마진, 적정가격 형성, 가공활성화 등 역할을 기대, 생산자는 친환경농산물 재배, 소비자를 생각한 농업 등에 역할을 기대함. 그리고 소비자는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관련소비에 관심, 가치와 상생에 대한 인식제고 등 역할을 기대, 행정은 지속가능한 행정, 체험활동 및 먹거리 교육 확대, 홍보 등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3-8〉 참고).

〈그림 3-8〉 충남 주체별 역할 주관식 설문조사 분석결과



주 : R programming package를 이용하여 워드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함.

- 주체별 역할에 대한 키워드는 관련업계 종사자의 경우, 유통, 가격, 소비자, 생산자 등의 순으로, 생산자의 경우, 친환경, 먹거리, 농업, 재배 순으로 나타남. 그리고 소비자의 경우, 지역, 소비, 농산물, 농업, 가치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행정의 경우, 농업, 행정, 교육, 이행, 지원, 기능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3-7〉 참고).

〈표 3-7〉 충남 주체별 역할 주관식 설문조사 분석결과(키워드 빈도수)

순위	관련 업계 종사자		생산자		소비자		행정	
	키워드	빈도수(건)	키워드	빈도수(건)	키워드	빈도수(건)	키워드	빈도수(건)
1	유통	10	친환경	9	지역	10	농업	12
2	가격	7	먹거리	8	소비	9	행정	7
3	소비자	7	농업	6	농산물	7	교육	6
4	생산자	6	재배	6	농업	6	이해	6
5	지역	6	생산	5	가치	4	지원	6
6	가공	5	생산자	4	먹거리	4	기능	5
7	농산물	5	소비자	4	생산	4	정책	5
8	식품	5	가격	3	충남	4	충남	5
9	구조	3	가치	3	생산자	3	먹거리	4
10	기능	3	건강	3	애용	3	안정	4
	합계	57	합계	51	합계	54	합계	60

주 : R programing package를 이용하여 워드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함.

● 12.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충남 및 시군 농정이 핵심적으로 변해야 할 것

- 지속가능한 농정 정책으로 변화(13명, 17.8%), 과감한 행정 혁신 지향(12명, 16.4%), 사회적 약자(소농) 보호 및 생활안정 지향(10명, 13.7%), 민관 거버넌스 확대(9명, 12.3%), 유통채널 다양화 및 스마트화기술 연계(7명, 9.6%), 환경친화적 생산방식으로 변화(7명, 9.6%), 기존 사업기준과 방식의 재점검(6명, 8.2%), 기술 연구개발(5명, 6.8%),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교류와 자원 순환(4명, 5.5%) 순으로 나타남(〈표 3-8〉 참고).

〈표 3-8〉 충남 및 시군 농정 핵심 변화할 사항 주관식 설문조사 분석결과

분과	응답 의견	주요 내용	응답수(명)	비중(%)
경제.일자리 문화.관광 복지.안전	<p>AI기반 빅데이터 분석 기술 농업기술의 현대화 중자산업의 국산화(내실화)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선별의 최적화 꾸준한 연구</p>	▶ 기술 연구개발	5	6.8%
농어업.농어촌 경제.일자리	<p>거버넌스 강화 민관 거버넌스 확대</p>	▶ 민관 거버넌스	9	12.3%

분과	응답 의견	주요 내용	응답수 (명)	비중(%)
복지.안전 문화.관광 정주환경.인프라 환경.에너지	<p>민관산학연단 뉴거버넌스 확대 확실한 민간거버넌스 확대 사회적 거버넌스 확대 농민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필요 시군농업회의소 확대 재난적 피해 발생시 민관의 상호 협력</p>	확대		
문화.관광 경제.일자리 농어업.농어촌 정주환경.인프라	<p>농업인의 자부심, 자긍심 함양 단순 생산업의 변화 요구(제조 및 가공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생산량 조절 및 농업기계화로 인력 최소화 생산이력제 등 생산자 보호정책정비 생활의 안정화 소규모 농업인 지원 증대 청년 농업인 양성 귀농교육 홍보 및 확대 충남도의 아이덴티티 구체화</p>	▶ 사회적 약자(소농) 보호 및 생활안정 지향	10	13.7%
경제.일자리 문화.관광 농어업.농어촌 환경.에너지	<p>국정과제인 푸드플랜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실행 생산자와 수요자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 유통 판매 폐기를 정책 지원과 전략 실행 소비자와의 만남 확대 농업인과 소비자 도농상생 농업모델 개발 육성</p>	▶ 생산자-소비자 간 상생교류와 자원 순환	4	5.5%
농어업.농어촌 복지.안전 경제.일자리	<p>운송·유통 체계화, 생산과 원활한 유통지원, 유통 채널 다양화 또는 제품 다양화, 유통라인 체계정립 유통물류센터 스마트화기술(물류용 로봇, 정보처리AI), 재난시 인력확충 및 판매대책프로세스화</p>	▶ 유통채널 다양화 및 스마트화 기술 연계	7	9.6%
농어업.농어촌 복지.안전 청소년계획단 경제.일자리 복지.안전 정주환경.인프라	<p>탁상행정에서 현장 행정으로의 유연한 사고 및 유연한 행정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아닌 누구나 모두에게 혜택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적극 행정 필요 행정혁신, 현장주의 농정혁신 기초단체의 자율성 확대 변화를 두려워 하지 않는 업무 태도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전담팀을 구성하여 장기적인 조사,시행 반영</p>	▶ 과감한 행정 혁신 지향	12	16.4%
청소년계획단 농어업.농어촌 경제.일자리 정주환경.인프라 환경.에너지	<p>재난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생존전략 수립 및 제도화 필요 강력한 제도 시행으로 엄격한 기준 적용 기존 사업, 지원 등의 기준 재 정립(연령대, 규모, 농업 형태 등) 6차산업에 대한 지원사업과 역량강화(관광-&gt;브랜드 구축-&gt;소비활동 증가-&gt;매출증대) 농정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포상 농촌 및 어가의 무차별적 지원 지양</p>	▶ 기존 사업기준과 방식의 재점검	6	8.2%
문화.관광 농어업.농어촌 경제.일자리 복지.안전 청소년계획단	<p>조례 및 법률의 정비 정책의 실행 및 확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개발 지속가능한 농정정책 유연하고 실효적인 정책 농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정책</p>	▶ 지속가능한 농정 정책으로 변화	13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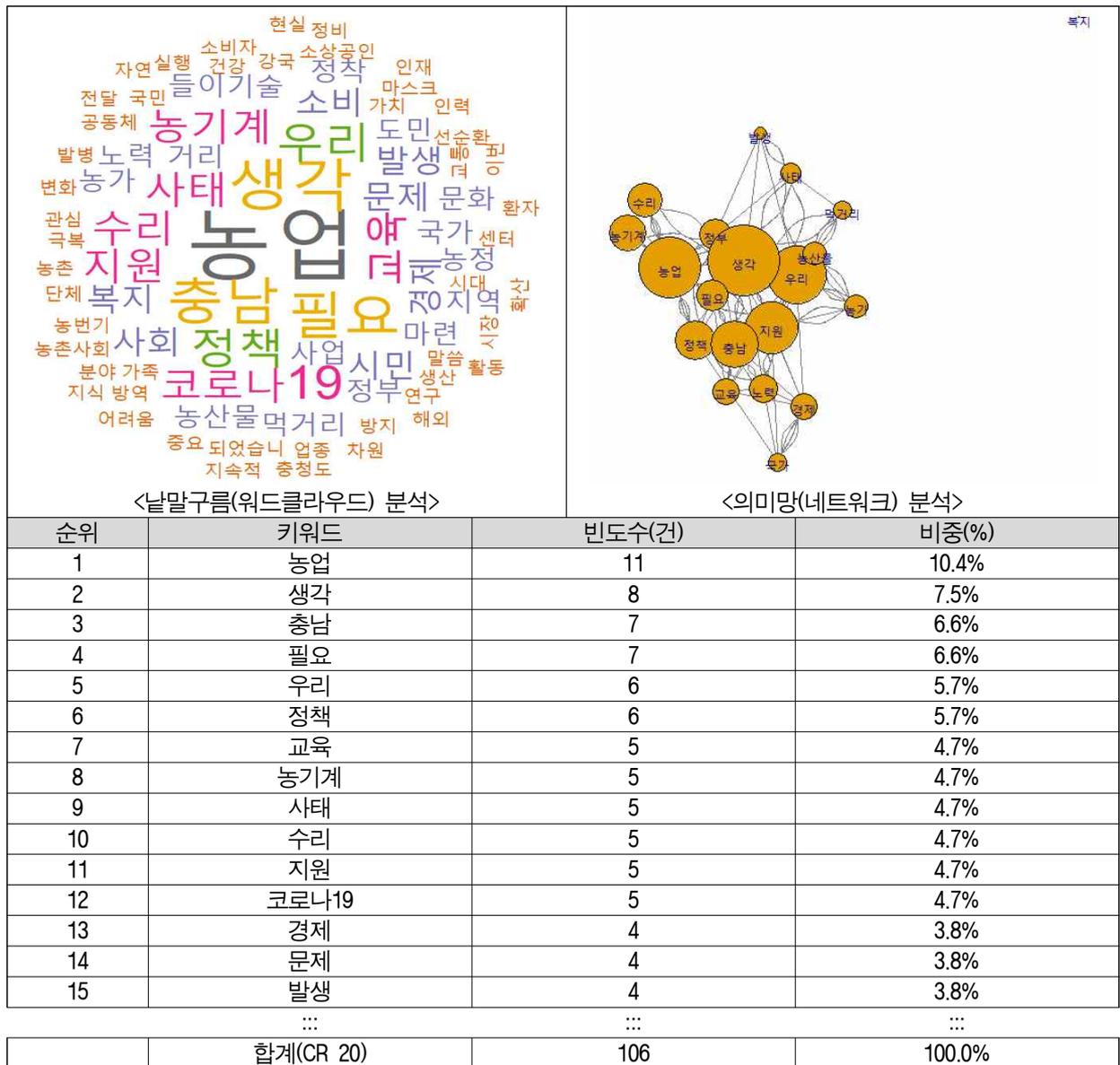
...	...	...
합계(CR 20)	72	100.0%

주 : R programming package를 이용하여 워드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함.

● 13. 기타 의견(〈그림 3-10〉 참고)

- 기타의견으로서 농업에 대한 생각, 우리와 충남, 정책, 교육, 농기계 등의 단어를 골고루 언급하고 있고 이들 단어들 간 상호 연관성 정도도 유사하게 나타남.

〈그림 3-10〉 기타의견 주관식 설문조사 분석결과



주 : R programming package를 이용하여 워드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함.

### 3. 요약 및 시사점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충남 내 기회와 위기에 놓인 직종
  - 기회인 직종은 1순위가 농림어업 관련직, 위기인 직종은 1순위가 서비스 등 자영업 관련직(외식업, 관광업) 인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충남의 농업·농촌 분야가 처한 긍정적인 현상과 이미지, 부정적인 현상과 이미지
  - 긍정적인 현상과 이미지로서 식품안전성 관심 고조·안전한 먹거리·식품위생 등 먹거리와 관련한 언급이 11건(17.5%), 부정적인 현상과 이미지로서 농업인력 부족·농촌일손부족 등 인력부족과 관련한 언급이 16건(21.1%) 순으로 응답함.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충남 농업·농촌의 현재와 미래 중요도와 공익적 기능
  - 충남 농업·농촌의 현재와 미래 중요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는 응답이 75%를 차지,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중요”할 것이라는 응답도 16.7%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높음.
  - 충남 농업·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공익적 기능은 “식량(농식품, 먹거리)을 안정적으로 공급”이라는 응답이 75%를 차지, “자연환경·경관보전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라는 응답이 12.5%를 차지함.
  
-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충남 및 시군 농정이 가장 근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 충남 및 시군 농정이 가장 근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농산물 유통, 가격을 비롯하여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이라는 응답이 45.8%를 차지, “충남 지역먹거리 선순환구축을 위한 정책”이라는 응답이 29.2%를 차지함.
  
-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주요 실행전략별 핵심내용(〈표 3-9〉 참고)
  - 충남 지역먹거리 선순환구축, 농업·농촌 사람과 인력 해결, 농산물 유통·가격·소득 및 경영안정,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 이행, 농촌거주 사회적 취약계층 통합돌봄 등 5대 실행전략(정책)을 선정하게 됨.
  - 객관식 설문조사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주관식 설문조사 분석결과에서는 주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음. 생산과 소비의 연결, 유통, 교육, 농업과

복지의 연계 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9〉 주관식 설문조사 분석결과 핵심내용 요약

주요 실행전략(정책)	낱말구름(워드클라우드) 분석	의미망(네트워크) 분석
충남 지역먹거리 선순환구축을 위한 정책	먹거리를 중심으로 생산은 물론 교육, 소비, 유통, 가공 등	먹거리를 중심으로 먹거리 생산, 먹거리 유통, 먹거리 교육 등 이들 단어 간 상호 연관성 높음.
농업·농촌 사람과 인력 해결을 위한 정책	농업정책 지원, 농촌지역 일손 확보, 교육 및 기계화 투자, 외국인인력 수급 등	각 단어 간 연관성 부족함. 별다른 대책 아이디어 부족함.
농산물 유통·가격·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	지역 내 유통, 농산물 생산가격,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지원 등	지역 내 생산과 소비, 유통 구조를 중심으로 가격을 형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상호 연관성 높음.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 이행하는 정책	친환경 농축산업 생산, 농가지원, 교육, 소비자 인식, 기술개발, 시설기반 등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중심으로 소비, 지원 등이 연관성이 있지만 대체로 각 단어 간 상호 연관성은 미약함.
농촌거주 사회적 취약계층 통합돌봄 정책	취약계층, 사회적 농업, 교육, 지원, 복지 서비스 개선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업과의 연계, 복지구조 개편, 교육의 중요성, 사각지대 지원 시급 등 이들 단어 간 상호 연관성 높음.

주 : 저자 작성함.

● 충남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체별 역할

-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관련업계 종사자는 유통구조 개선, 적절한 유통마진, 적정가격 형성, 가공활성화 등 역할을 기대, 생산자는 친환경농산물 재배, 소비자를 생각한 농법 등에 역할을 기대함. 그리고 소비자는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관련소비에 관심, 가치와 상생에 대한 인식제고 등 역할을 기대, 행정은 지속가능한 행정, 체험활동 및 먹거리 교육 확대, 홍보 등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 및 시군 농정이 핵심적으로 변해야 할 것

- 지속가능한 농정 정책으로 변화(13명, 17.8%), 과감한 행정 혁신 지향(12명, 16.4%), 사회적 약자(소농) 보호 및 생활안정 지향(10명, 13.7%), 민관 거버넌스 확대(9명, 12.3%), 유통채널 다양화 및 스마트화기술 연계(7명, 9.6%), 환경친화적 생산방식으로 변화(7명, 9.6%), 기존 사업기준과 방식의 재점검(6명, 8.2%), 기술 연구개발(5명, 6.8%),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교류와 자원 순환(4명, 5.5%) 순으로 나타남.

● 5대 실행전략별 핵심내용을 감안하여 새로운 접근관점과 대응방향으로 전환 필요

- 충남 지역먹거리 선순환구축, 농업·농촌 사람과 인력 해결, 농산물 유통·가격·소득 및 경영안정,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 이행, 농촌거주 사회적 취약계층 통합돌봄 등 5대 실행전략(정책)을 “지속가능하게, 적극적인 방식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04 접근관점의 변화와 대응방향

### 1. 접근관점의 변화

#### ● 일시적, 한시적 긴급대책이 아닌 새로운 정상(New Normal)을 향한 농정 전환

- 기존 사업을 짜깁기·반복하는 수준의 긴급대책,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지원중심의 긴급 대책으로부터 벗어나서 보다 근본을 점검하는 농정, 새로운 정상으로 진입하기 위한 농정, 지속적인 농정으로 전환
- 지금 위기를 기회로 삼고 비상 농정대책이 아닌 일상의 농정정책으로 전환하되 농촌과 농업이 분절된 관점에서 농업과 농촌이 통합한 관점으로 전환
- 일회성 팔아주기 및 착한소비 운동 전개를 통한 일회성·시혜성 도움이 아닌 도민과 시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접근관점 및 인식으로 전환

#### ● 사람중심 관점으로, 돌봄과 포용 관점으로, 환경과 생태의 관점으로 농정 변화

- 보조사업 수혜자·시혜적 피해자 입장이 아닌 능동적 주체인 농민 관점, 산업종사자인 농업인 관점이 아닌 공적 주체인 농민 관점으로 변화
- 농민의 자긍심, 자존감,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 관점으로 농정 변화
- 농촌에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은 여러 측면에서 열악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부족, 특정계층의 수혜적 돌봄에서 마을공동체 돌봄과 포용의 관점으로 변화
- 지역 내 환경부하량에 맞는 수준으로 환경 및 생태,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변화

☞ 도민 의견을 수렴한 심층 설문조사 결과, 저자를 포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먹거리 선순환, 농업인력, 소득 및 경영안정, 환경친화, 통합돌봄” 대응방향 키워드를 도출하였고 이에 맞는 추진과제를 제안함.

## 2. 대응방향 및 과제<sup>3)</sup>

### 2-1. 충남 지역먹거리 선순환구축을 위한 정책<sup>4)</sup>

- 핵심문제는 민관협치 운영 미흡, 조직 및 예산 등 각종 기반 부족, 조직화된 생산자 및 시민 부족
  - 충남은 민선 5기와 6기에 걸쳐서 운영해 오던 3농혁신위원회 및 분과별 위원회 등은 민선 7기 들어서면서 과거의 경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음. 민관협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함.
  - 충남은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충남 먹거리 보장 기본계획(안)(2019.09.)”을 수립해서 물적 기반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부터 난항을 겪고 있음. 인적 기반으로 먹거리 관련 민관협치 기구와 통합컨트롤타워 조직구성과 예산확보도 부족함. 단, 제도 기반으로 먹거리보장 기본조례는 제정됨(2019.12.30.).
  - 이와 같은 이유로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추진동력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있고 지역 내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 조직화 정도나 결속력 등에 여전히 한계가 존재, 조직화된 생산자와 소비자의 힘이 부족한 상태임<sup>5)</sup>.
- 핵심방향은 민관협치 및 컨트롤타워 구성과 운영, 조직 및 예산 등 각종 기반 조성, 생산자 및 시민조직 양성
  -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은 단순히 생산, 유통, 소비, 교육 사업 등의 단편적 실행이 아니라 민관협치(거버넌스) 구성과 운영을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핵심임. 그리고 형식적인 민관협치가 아닌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협치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함.
  - 충남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위상에 맞춘 먹거리 통합컨트롤타워 구성과 운영, 먹거리 관련 기존 사업 간 연계 및 추진체계 정비 등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및 예산 등 기반조성을 먼저 실행함. 이후 준비가 되면 먹거리 가공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물적 기반 구축을 실행함(선 S/W, 후 H/W 원칙).
  - 충남 지역 내 품목별 균형적인 자급률 달성, 먹거리 생산조직화 강화, 충남 먹거리 공

3) 자료 : 1.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코로나19대응 연구추진단(2020), 코로나19 대응 시리즈 : “Bounce-Back 충남”을 위한 분야별 대응방안 모색, 충남리포트 제353호, 충남연구원.

2. 강마야, 김기홍(2020), 코로나19 관련 농업·농촌 분야 긴급지원대책 추가의견, 충청남도 제출자료(2020.04.03.).

4) 자료 : 강마야(2019),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방안 연구 : 충청남도 지역먹거리 전략, 2019년도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공동연구 최종보고서.

5) 주 : 충남 광역단위와 별개로 일부 시군단위에서는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일명 푸드플랜) 연구용역을 의뢰, 수행하는 중이고 이미 일부 사업을 진행하는 시군도 있음.

동체 육성 및 먹거리 시민 양성에 주력해야 함.

- 먹거리 사업은 단순히 유통망을 확보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 내 모든 자원들이 순환되는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사람 중심으로 연계되어야 함이 우선임.

● 핵심과제 ① 충남 도민들로부터 내외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

- 충남 먹거리 선순환체계(푸드플랜)에 대한 내외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 특히 일반 도민에게 ‘푸드플랜’이란 용어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므로 정책 중요성과 필요성 공감에 더딜 수밖에 없음.
- 참고로, 3장 충남도민패널 심층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살펴봤듯이 먹거리와 관련해서 먹거리 교육 활동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내용1. 충남 도민들로부터 내외부 공감대 형성이 제대로 되어야 제도 기반과 인적 기반 구축 등의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기에 시급히 집중적인 교육사업과 홍보
- 내용2. 교육사업 방향은 “먹거리 기본권, 환경, 복지, 순환, 자치”를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할 것인가?라는 문제인식에 초점을 맞춰서 주체들이 먼저 고민
- 내용3. 전제조건으로 교육과 홍보는 단발성,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고 민간과 공공 차원에서는 실행할 의지와 체계에 대한 확고한 실행 준비

● 핵심과제 ② 충남 먹거리 정책추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민관협치 등 조직 정비

- 다양한 부서와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및 사업을 융복합해야 하므로 행정과 민간 추진체계 정비, 민관협치의 실질적 운영이 필요함.
- 내용1. 도청 내 먹거리 사업(생산, 가공, 유통, 소비, 마을, 복지, 교육, 재활용 및 재이용, 사회적 협동조합)과 관련 있는 통합 전담부서 구성, TF형태로 우선 구성하여 역할과 기능 확정, 최소한 팀장 1명과 주무관 3명을 배치
- 내용2. 도지사 직속의 먹거리 정책관 배치하여 통합 전담부서가 추진동력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 민간과 행정의 가교 역할, 도지사 수시 보고 등
- 내용3. 도지사 직속의 먹거리위원회(민관협치 기구) 구성,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효성 있는 운영(예. 캐나다 토론토의 먹거리정책위원회 사례, 청양군이 농촌공동체과로 통합조직 개편 사례 등)

● 핵심과제 ③ 충남 먹거리 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기존 사업과의 통합, 연계를 통한 예산 확보

- 먹거리 관련 유사중복사업이 많으므로 이들을 통합,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음. 유사중복사업과 선순환에 위배되는 보조사업은 단계적 축소를 통하여 예산확보 필요함.
- 내용1. 농림축산식품국 내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식량원예과 등 사업 중 먹거리 관련

사업이 가장 많으므로 충남산 먹거리 이용을 우선 적용(사업명\_학교급식지원, 학교우유급식지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아동복지시설 우유 지원,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식생활교육 운영(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 내용2. 식품관련 부서 사업에 충남산 먹거리 이용 장려(사업명\_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지원, 식품 HACCP 컨설팅비 사업 지원, 식품안전 지도 및 단속·대응 통합망 운영·검체, 수거 등)
- 내용3. 저소득 인계층 지원사업(사업명\_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무료경로식당 운영, 양곡비 지원 행복경로당 운영), 장애인계층 지원사업(사업명\_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등), 아동계층 지원사업(사업명\_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급식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조제분유 지원 등)에 적용
- 내용4. 먹거리 관련 보조사업을 선순환이라는 키워드로 조정, 정책 틀 구상과 내용들이에 맞게 설계, 선순환에 초점을 맞춘 지원기준과 집행방식으로 변경, 재검토(예. 수입산 재료로 만든 유기질비료 지원 중단, 지역 내 부산물로 만든 유기질비료 지원 등)

● 핵심과제 ④ 충남 내 다양한 먹거리 생산기반을 통한 균형적인 품목자급률 달성, 생산자조직 및 소비자조직 기반 강화

- 충남 지역먹거리 자급률 목표치 설정과 균형적인 품목자급률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하고 품목의 다양성을 위한 생산·유통·소비·순환체계 구축을 하도록 함.
- 내용1. 충남 전체적으로 쌀에 편중되어 있는 구조, 15개 시군별로는 특정품목별 단작화된 구조, 편중된 구조를 “품목의 다양화, 유통과 소비 방식의 다양화, 가치제고의 다양화” 구조로 전환
- 내용2. 먹거리 정책에서 중요한 지점은 생산 기반이 튼튼해야 그 이후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충남 내 15개 시군 생산자 조직이 작부체계부터 환경친화적인 생산 방식으로 이행<sup>6)</sup>, 출하계약 단계까지 준비
- 내용3. 지역먹거리 생산자 조직 강화와 소비자 조직 강화를 위한 교류 확대, 교육·체험·꾸러미사업·마을만들기 사업 공동으로 참여하고 실시

● 핵심과제 ⑤ 충남 지역먹거리 꾸러미사업 정례화, 온라인 플랫폼 구축<sup>7)</sup>

- 내용1. 15개 시군별 ‘충남산 식재료 꾸러미 제품’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등으로 구성된 원제품(원물)과 가공품에 대한 모든 것을 정보화(DB화), 농사랑 온라인쇼핑몰 정비
- 내용2. 15개 시군별 유치원 및 학생 가정에게 학교급식 공급의 충남산 친환경식재료(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관련 가공품 포함) 꾸러미 배달 정례화, 도내 취약계층(복지수급

6) 주 : 환경친화적인 생산방식으로 이행에 대한 세부내용은 뒷부분(2-4)에서 별도로 자세하게 기술함.

7) 자료 : 강마야,김기홍(2020), 코로나19 관련 농업·농촌 분야 긴급지원대책 추가의견, 충청남도 제출자료(2020.04.03.).

대상에서 빈틈이 발생하는 계층) 중심으로 충남산 식재료 꾸러미 배달 정례화

- 내용3. 친환경농산물팔아주기 운동과 같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시군 단위 꾸러미사업 정례화, 광역단위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시군단위는 기존 학교급식지원센터망과 인력풀 활용한 수요처 발굴 및 접수, 지역꾸러미사업 연계 플랫폼 구축 지원(온라인 상에서 생산자는 지역, 상품 소개 등 등록하고 소비자가 직접 구매 가능), 홍보비 지원, 꾸러미 포장 및 물류비 지원, 일부 품목 차액지원, 지역활동가 인건비 지원 등
- 내용4. 도청 및 15개 시군별 청사 급식시설, 관공서 및 기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에 충남산 식재료 사용 권장하고 충남산 식재료 사용 시 차액지원사업 실시, 도민·시민·지역 내 식당 등에게 충남산 식재료 사용 권장하고 충남산 식재료 사용 시 차액지원사업 실시
- 내용5. 다양한 소비와 판매방식 활성화(온라인 직거래 판매, SNS 판매, 로켓배송, 드라이브스루 등), 생산자와 소비자 간 농업농촌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망라한 온라인 도농교류 플랫폼 확대 등
- 내용6. 순환체계 중 폐기 단계에서 농산물과 관련한, 불필요한 일회용 포장용품 줄이고 환경친화적이고 재생가능한 재질로 전면 전환, 폐기 단계에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과 관련하여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전환이슈 공론화
- 내용7. 계절 농산물 판매축제, 마을단위 체험 및 관광축제 등 집합행사 개최불가로 관련된 마을, 지역단위 활동하는 자치조직(농업관련법인, 마을사업조직 등)에 대한 지원 필요, 시군별 농산물 판매축제와 마을단위 체험 및 관광축제 현황 실태조사, 자치조직의 운영비 및 인력상황 점검 등을 통해서 마을사업조직 운영비 지원, 마을사무장 인건비 지원, 판매축제 예정된 물량의 온라인판매 혹은 꾸러미사업으로 전환

● 핵심과제 ⑥ 조직 및 예산 등 기반이 완성된 이후 수요에 맞는 물적 기반 추진

- 현재 많은 시군에서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먹거리 준비위원회 구축부터 사업도출, 국비공모사업 신청까지 모두 외부화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 내용 또한 천편 일률적으로 하드웨어 위주의 먹거리통합센터건립이 우선 순위로 논의되고 있음.
- 내용1. 광역단위, 시군단위 통합물류와 통합조직 구현을 위해서 충남 내 15개 시군 생산자 조직 기반이 튼튼해야 하고 식재료 물류 흐름에 대한 정보 파악, 생산자와 소비자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타당성 검토, 운영비 마련, 비용편익 분석, 운영주체 설정 등 운영을 위한 조직과 예산 문제해결이 핵심 전제조건으로서 우선 검토
- 내용2.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APC(산지유통센터) 건립이라든가 통합먹거리지원센터 건립과 같은 하드웨어는 후순위로 논의해야 하고 핵심 전제조건 검토가 완료된 이후 추진

## 2-2. 충남 농업·농촌 사람과 인력 해결을 위한 정책

- 핵심문제는 농업노동력 부족, 고용노임비용 증가가 경영부담으로 연계, 열악한 농업노동환경, 농업인력 수급실태 미파악, 농업인력 양성과 확보 계획 부재<sup>8)</sup>
  - 외국인 출입국 통제의 여파로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 미입국으로 인한 농업노동력 인력수급에 차질을 겪고 있음. 하지만 농업노동력 부족 문제가 단순히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와 같은 저가농산물이 유지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상대적으로 낮은 노임을 받는 외국인 노동력 공급이 있었던 것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함.
  - 외국인 농업노동력 부족 문제가 빚어지면서 농작업이 집중되는 5월부터 6월까지 고용노임비는 평년의 2배 이상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음. 농업경영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고용노임비이므로 경영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음.
  -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 농정이 되면서 농가 입장에서는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위하여 규모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농업노동력을 더 필요로 하는 구조 반복, 아니면 기계화를 통한 규모화 증가가 용이해지게 되는 구조, 반면 중소농 이하의 농가는 더욱 농업노동력 조달과 기계화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 반복되고 있음.
  - 지역별 특화작목이 유사하고 단작화 구조가 유지되면서 수확이 겹치는 시기에 단기 노동력이 집중되므로 임금노동자에게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식, 어렵고 힘든 농사노동 강도, 열악한 농작업 환경,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인정을 해주지 않는 현실,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농업인력 양성과 확보는 공염불에 그침.
  - 전체적인 농업인력 수급 실태파악 조차 못하는 현실에서 이를 타개할 만한 중장기 계획조차 부재한 현실이고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별다른 대안이 나올 수 없음.
  
- 핵심방향은 농업인력에 대한 불편한 진실 공론화, 농업노동의 소중함에 대한 인정과 배려, 3D 농작업의 ICT 기술 적용과 기술개발 투자, 농업인력 중장기 계획 수립
  - 단순히 농업노동력 부족 문제를 떠나서 그동안 농업노동에 대한 가치평가 미흡, 외국인 노동력을 임시방편으로 봉합한 무책임한 행정<sup>9)</sup>,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으로 지탱해 온 농업생산, 외국이 노동력이 없다면 농산물 대부분은 생산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각, 이제 더 이상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만으로 유지

8) 자료 : 1. 한국농정신문(2020), 농촌 인력부족, 정부의 책임이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0829>, 검색일자 : 2020.05.10.)

2. 한국농정신문(2020). 간데없는 농촌 인력, 농번기 어찌하나.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0833>, 검색일자 : 2020.05.10.)

9) 주 :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 3월 30일 발표한 '농번기 인력 수급 지원 방안'에 따르면 ① 방문동거(F-1) 외국인의 계절근로 활용, ② 고용허가제(E-9) 근로자의 단기 근로 허용, ③ 인력중개센터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책 마련함.

할 수 없는 농업인력의 현실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진실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함.

- 농민을 사람으로서 대우해주고 자존감 및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 농업노동에 대한 그만한 가치를 사회가 인정하는 정책이 필요함. 또한 신규 유입 농업인(청년 창업농, 청년 승계농, 귀농인, 귀촌인, 귀향인 등)에 대해서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함.
- 3D 농작업(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작업)의 경우, 일정부분 농작업의 자동화 및 기계화 개발 투자에 박차를 가해야 함. 특히 대단지 외부기업자본이 아닌 실용적인 수준에서 중소농 단위의 소규모 스마트팜 보급도 필요함.
- 정확한 농업노동력 수요와 공급 실태 파악, 가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 동원, 기존 농업인력 수급 해결을 위한 사업 점검과 모니터링, 농업인력 양성과 확보를 포함한 중장기 계획과 로드맵 수립이 필요함.

● 핵심과제 ① (임시방편 대책) 농작업지원단 지원사업 확대 및 농업인력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차액 지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포기시기 연기 등 농촌인력 부족 발생, 도시에서는 무급휴직·특수고용직·비정규직 등 실업인력 발생, 농번기만이라도 농촌과 도시 인력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인력 중개사업 실시, 그에 따른 비용차액을 지원함.
- 내용1. 농식품부의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실질적 운영 건의는 물론 충청남도의 농촌인력 농작업지원단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방식 변화, 실질적 운영
- 내용2. 농업인력 인건비 상승에 따른 차액지원 혹은 생산비 차액 지원사업 실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홍보비 지원, 도시근로자 농업 관련 교육 실시 등

- 현행 사업은 지원 대상이 기존 0.5ha 이하 농지를 경작하는 75세 이상 농가에서 1ha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65세 이상 농가로 확대(중소농 및 고령농 대상 맞춤형 인력 지원)
- 충남도와 농협이 소규모 고령농가에 발작물 농기계작업 인력 지원, 작업료의 70%를 지원하는 방식
- 충남도는 농작업지원단의 농기계 농작업료 일부를 지원하고, 전업농 농작업지원단에 대해서는 교통비와 간식비 등을 보전
- 농협은 농작업지원단 모집 교육·훈련, 농촌인력중개센터 등록, 농가 알선 등을 추진하며 작업 중 발생한 사고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일손이 필요한 농가 : 시·군 농정부서나 해당 지역농협에 신청
- 농기계 작업지원 및 전문 인력으로 활동하고 싶은 대상자 :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관련 교육을 거쳐 작업자로 활동

자료 : 충청남도(2019), 2020 농작업 지원단 육성운영 사업계획.

● 핵심과제 ② 3D 농작업의 ICT 기술 적용, 자동화 및 기계화 개발 투자, 저렴한 수준의 보급형 기술개발과 상용화<sup>10)</sup>

-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를 낮추고 새롭게 농업에 진입하려는 사람에게 진입장벽을 낮추

10) 자료 : 오용준 외(2020), 제4차 충청남도종합계획(2021~2040), 미래 계획과제 공유를 위한 충남도·충남연 합동 워크숍(2020. 04. 27.~05. 08.)

주 : 위의 자료 중 농림축산업 분야 원고(저자 작성)로부터 발췌하였고 일부 수정과 보완을 거침.

고 농업작업 환경을 좀 더 안전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농축산업은 생산과정에서 어렵고, 더럽고, 힘든 3D 농작업 과정이 있고 현재 이들 농작업을 외국인 노동자가 대체하는 현실, 이런 농작업 과정에 ICT 기술을 적용하여 응용, 확산이 필요함.
- 내용1. 3D 농작업(어렵고, 더럽고, 힘든일<sup>11)</sup>)을 ICT 기술을 적용하여 농축산업 농작업 응용 확산(예. 실시간 약취모니터링으로 위험경보 단계에 경영주에게 알림, 축사 내부 온도습도 자동조절(현재 상용화), 사료급여 자동조절, 시설원에 내부 온도습도 자동조절 및 개폐자동화(현재 상용화) 등 Io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농장 확산 등)
- 내용2.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스마트팜 조성으로 농작업의 편리성 및 안전성 확보, 작은 규모의 농가단위에서도 쉽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보급형 제품개발
- 내용3.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수용과 수요자 중심의 통합플랫폼으로 미래형 스마트윈에 기반 구축(H/W와 S/W 동시 실시)

● 핵심과제 ③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확대,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농업 이행, 창농교육기관 기능, 중간코디네이터 양성<sup>12)</sup>

- 내용1. 기존 농민에게 자존감을 회복, 정체성을 복원하는 교육, 심리 프로그램 도입
- 내용2. 기존 농민이 그동안 사회로부터 노동의 댓가에 응당한, 농업의 중요성에 응당한 대우를 받아 오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다시 제대로 인정해주는 농민수당 지원 확대, 특히 농민은 자연과 함께 농사짓는 사람이라서 노동의 가치에 신성함 고려
- 내용3. 신규 농업인 계층인 귀농인, 귀촌인, 귀향인, 청년농업인의 경우, 처음부터 농업을 유인하는 정책보다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분야에서 지원과 배려 정책 필요(예. 주거와 농지문제 해결, 그 외에도 가족단위가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 등), 이러한 선행조건 완료된 이후 농업으로 이행 가능
- 내용4. 시군별 농업기술센터 및 충남농업기술원의 교육과 컨설팅 기능을 극대화하여 농촌 고령화, 기후변화 등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창농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추가(생산, 가공, 유통(마케팅·홍보), 서비스(체험·관광), 스마트팜, 바이오, 거버넌스 등)
- 내용5. 농업관련 법인·조직·단체에서 활동하는 전문농업활동가 혹은 중간코디네이터 양성, 농민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것 외에 중간지원을 위한 전문농업활동가 양성 중요, 이

11) 주 : 시설원에 농업 분야에서는 무더운 여름날, 추운 겨울철에 시설하우스 안에서 각종 파종, 잡초제거, 벌레제거, 수확 등의 작업을 진행,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는 작업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 투입, 축산 분야에서는 축사내부 약취관리, 가축분뇨 처리, 축사내부 청소 등의 작업을 진행,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는 작업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 투입으로 대체하는 현실임.

12) 자료 : 오용준 외(2020), 제4차 충청남도종합계획(2021~2040), 미래 계획과제 공유를 위한 충남도·충남연 합동 워크숍(2020. 04. 27.~05. 08.)

주 : 위의 자료 중 농림축산업 분야 원고(저자 작성)로부터 발췌하였고 일부 수정과 보완을 거침.

들에게 인건비 직접 지원사업 도입(이유는 농업을 실제 하는 사람 외에도 유통, 소비, 교류, 정보습득, 기술보급, 인증, 도농교류 플랫폼 등을 지원하고 보조를 해 줄 사람 필요하기 때문)

● 핵심과제 ④ 충남 농업인력 수급 실태조사 및 증장기 계획 수립

- 내용1. 충남의 농업인력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 전수 실태조사 실시, 특히 지역별·시기별 농번기 농업인력 수급 현황 및 추가 수요 실태 파악, 농업인력 DB 구축
- 내용2. 충남의 농업인력 전수 실태조사 결과에 입각하여 농업인력 증장기 계획 수립
- 내용3. 농업인력 현실에 대한 사회 전체적으로 공론화 과정, 근본적인 대책마련(경영안정 및 소득 문제)을 위한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
- 내용4. 농업인과 농민의 정의와 개념 설정, 정책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방식과 정책지원 검토
- 내용5. 농업인력 부족에 대응한 농작업 기계화, IoT를 접목한 기술, 소규모 단위의 스마트팜 시설 도입 등 그동안 미뤄졌던 공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 필요

## 2-3. 충남 농산물 유통·가격·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

- 핵심문제는 저평가된 농산물 가격, 경영비 상승, 농업소득 정체 혹은 하락
  - 농민들의 희망사항은 “내가 정성을 들여서 키운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파는 것”으로 단순해보이지만 실제 복잡한 이유로 제값을 받을 수 없는 현실임.
  - 수입산 농산물로 인한 국내산 농산물의 낮은 가격, 농산물 생산량과 재배면적 변동에 따른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식량이 주요 공공재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맡겨진 가격, 이와 동시에 국가가 농산물을 물가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해서 통제하는 가격, 생산과정의 노동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낮은 가격 등이 문제<sup>13)</sup>임.
  - 현재 농업에서 사용하는 농자재는 대부분 수입산 재료이므로 국제유가나 세계경제 흐름에 영향을 받게 되어서 경영비 불안정성 요인으로 이어짐. 경영비 불안정에 덧붙여 농산물 가격 불안정성까지 겹치면서 농업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구조임.
  
- 핵심방향은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의 가격안정제, 유통 및 가공 등 판로 확보를 위한 다각화,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
  - 생산자 입장에서 노동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 정의로운 가격 수준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정의로운 가격 수준임.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수입과 공급에 맞춘 균형가격 정책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간극과 차이를 매꿔 주는 공적개입이 불가피한 가격정책이 되어야 함.
  - 생산자 입장에서는 농산물 가격 문제와 더불어 농산물 판로 및 유통 문제가 가장 힘든 점인데 이를 공적 영역에서 공적 주체가 공동체와 같이 해결하는 정책이 되어야 함.
  - 생산주의 중심 농정에서 생긴 자재지원 사업 및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과 같은 시혜성 보조사업에서 탈피하여 농민이 직접 소득지원혜택을 누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 핵심과제 ① 농산물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의 가격안정제 도입
  - 현재 가락동 도매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농업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실질적으로 농민의 농업경영비 및 소득을 보전하는 수준이 되기에 미흡할 수밖에 없음.
  - 빈번한 자연재해, 가격의 등락과 폭락 등을 피해서 농가는 생산비를 보장받고 다음 해의 영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적 차원의 근본적인 소득보장 정책 필요한 이유임.

---

13) 주 : 시장경제 이론 상 농산물 가격은 수요와 공급 간 균형지점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현실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가락동 도매시장 경매를 통해서 가격기준이 형성됨. 과연 이 가격은 균형지점을 맞춘다고 할 수 있는가, 이 가격은 진정으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인가, 우리가 먹는 농산물 가격은 과연 적절한 수준인가, 이를 결정짓는 실질적 주체와 집단은 누구인가, 이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주체인가 등 농산물 가격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해답을 도출할 때임.

- 내용1. 현재 충청남도가 시범사업 추진 중인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시군당 2개 품목에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 일부를 보전(80%), 농가 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중이나 제도 발동여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효성을 거두기에 미흡, 향후 전향적으로 “농산물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의 가격안정제” 도입 필요
- 내용2.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농산물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의 가격안정제”의 농산물 최저 가격수준으로서 비료, 농약, 농기계 임차료, 토지임차료, 고용노임비를 포함한 경영비 반영
- 내용3.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농산물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의 가격안정제”의 농산물 최대 가격수준으로서 자가노동에 따른 자가노임비를 상정한 생산비 반영(농가 노동에 따른 적절한 대가 지불해야 계약재배 참여율 증가, 조직화에 유리한 조건 형성, 가격안정에 필요한 물량 확보 가능)
- 내용4. 품목선정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품목별 생산량면적·가격 통계 구축
- 내용5. 해당품목의 공급과잉과 전국적인 가격폭락 문제에 대한 보완책, 시군에서 품목 선정 이후 농가들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와 도덕적 해이 문제(moral hazard)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로서 투명한 정보 공유 필수)
- 내용6. 가격교섭력 및 협상력 확보<sup>14)</sup>를 위한 생산자 조직화 선결, 생산자와 소비자 간 계약생산-계약유통-계약소비-계약가격지불 시스템 구축 등 동시 진행

## ● 핵심과제 ② 유통·가공·소비까지 고려한 판로 확보 다변화

- 생산자 입장에서는 농산물 가격 문제와 더불어 농산물 판로 및 유통 문제가 가장 힘든 점인데 농민 개별단위로서 대응하기 힘들고 조직화된, 공적 영역의 공적 주체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충남산 농산물의 활성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원물 형태가 아닌 가공품 형태로 개발, 보급, 판매되는 것이 최근 식품소비 트렌드이므로 판로확보의 다변화가 필요함.
- 유통경로에는 크게 충남농협중앙회지역본부, 지역농협 등을 통한 충남오감 브랜드 통합마케팅 실행경로와 품목별 통합마케팅,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농업인 사업 조직으로 유통경로 등이 있음.
- 그 외의 유통경로에는 품목별 영농조합법인 중심의 개별유통, 조직화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중소규모 이하의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은 개별출하, 분산출하되는 유통경로가 있음. 이 경우는 농민 간 조직화가 제대로 될 수 없는 여러 제약 조건에 놓여있음.
- 내용1. 지역 외부로의 유통 경로(벤더, 바이어, 중간유통업체 등)를 고려한 경우, 물량의 규모화, 조직화, 품질규격화 등 사업 실시, 지속적으로 출하농민 조직화 사업 실시

14) 주 : 농산물 유통의 경우, 판매자인 농가는 다수이고 구매자인 유통업체는 소수인 독과점 시장(소비자도 다수이므로 완전경쟁시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중간 유통단체를 거치는 것이 현실)이므로 농가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거래교섭력과 협상력(buying power, bargaining power)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 4~22%에 불과한 품목별 계약재배 및 약정수매 물량을 5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내용2. 지역 내부로의 유통 경로(공공조달, 로컬푸드 등)를 고려한 경우,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내에서 출하할 수 있도록 사업 실시, 마을단위 및 공동체 단위 농민조직화 실시
- 내용3. 지역 내부로의 유통 경로의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정기적인 교류 플랫폼 구축, 꾸러미사업 정례화, 먹거리 공공성 교육과 상시적인 계절체험 사업 실시
- 내용4. 충남농업6차산업 혹은 농촌융복합사업을 실시하는 조직, 단체, 법인 등과 지역산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 간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 지역산 농산물 가공 시 업체와 농민에게 인센티브 부여, 차액지원 사업 실시, 이를 통해서 생산되는 상품은 공적 영역에서 소비(각종 공식행사, 명절선물 등 충남산 농산물 이용한 가공상품 구매 정례화)

● 핵심과제 ③ 기존 시장가격 왜곡하는 보조사업을 직접 소득지원 사업으로 개편<sup>15)</sup>

- 직접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비해서 간접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중간 전달과정에서 각각의 이해관계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있으므로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귀속되는 보조금 전달율(transfer rate)이 낮고 자원배분에 있어서 왜곡되는 경향이 있음.
- 생산주의 중심 농정에서 생긴 자재지원 사업 및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과 같은 시혜성 보조사업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혜자 간 불균형(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이 나타나는 폐해가 있음.
- 따라서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농자재 보조사업은 지양하되 환경을 고려한 농산물에는 가격 지지성격으로서 직접 소득지원 정책으로 전환 필요,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함.
- 재원확보를 위해서 기존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보조사업은 감축하고 직접 소득지원 사업으로 개편, 이를 위해서 농림축산분야 세출예산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함.
- 내용1. 구조조정 영역으로서 ① 개인책임 영역은 식량원예과 및 축산과의 생산 영역 사업, ② 시장책임 영역은 농식품유통과의 유통 영역 사업, ③ 공공책임 영역은 산림자원과 및 농촌활력과의 기반확충 영역 사업이 주를 이룸.
- 내용2. 구조조정 단계로서 ① 일몰은 식량원예과 및 축산과의 생산 영역 사업, ② 축소는 농업정책과 및 농촌활력과의 위생과 기반확충 영역 사업, ③ 확대는 식량원예과의 경영·소득 영역 사업, ④ 유지는 농촌활력과의 기반확충 영역 사업이 주를 이룸.
- 내용3. 직접지불제 사업, 차액지원, 수당지급, 공공먹거리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경축순환재배방식을 통한 먹거리 생산시 인센티브 부여 등 농민이 직접 소득지원혜택을 누리는 정책으로 전환

● 핵심과제 ④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기초실태조사, 정교한 소득 및 경영안정대책 수립

- 내용1.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유통경로 및 출하실태조사, 농산물 판매 및

15) 자료 : 강마야(2019), 충남 농림축산분야 예산사업 재정혁신 평가기준 및 분석, 현안과제연구, 충남연구원.

수취가격실태조사, 학교급식에 납품하던 농업인·농가·생산자조직·생산자단체의 유통경로 및 출하실태 조사

- 내용2. 공공조달형(학교급식, 기관급식, 공공급식 등) 농산물 차액지원사업을 통한 수취가격 보장 확대, 농산물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의 가격안정제 시행으로 수취가격 보장 확대, 유통 및 가공경로 확보 등 안정적인 판로 개척
- 내용3. 긴급위기농가의 경우 충남형 농가재난지원금 실시
- 내용4. 농어촌진흥기금 활용 및 기존 농정 보조사업 재편을 통한 추가 예산 확보방안 마련
- 내용5. 여러 가지 다양한 실행전략, 다양한 농민 형태, 지역별 상황과 여건, 추진할 주체설정을 고려한 정교한 수준의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 대책 수립

## 2-4. 충남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 이행하는 정책

- 핵심문제는 고비용·고투입 농법, 생산성 향상 농법, 환경 중요성 인식 미흡
  - 환경과 생태보전에 역행하는 고투입·고비용 농법은 비용상승, 환경부하 악영향
  - 단위 당 생산량 증대를 통한 농업소득 극대화 경영이론은 현실에서 불가능
  - 생산성 증대만을 목표로 해왔던 농업은 결국 환경이라는 더 큰 틀을 무시
  
- 핵심방향은 저비용·저투입 농법 전환, 환경친화 농축산업으로 전면 이행, 지역단위 농업환경보전정책 확대
  - 화학재를 덜 사용하는 저비용·저투입 농법으로 전환, 환경친화 농업으로 전면 이행
  - 지역의 환경부하량을 감내할 수준에서의 환경친화 축산업으로 이행
  - 국가에서 시행하는 선택형 공익 직불제 등과 더불어서 지역단위 농업환경보전정책 확대 등 전방위적인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의 이행
  - “관행농법에서 환경농법으로, 단절농업에서 순환농업으로, 과잉사육에서 적정사육으로, 재생불가능한 폐기물에서 재활용으로” 변화 시도
  
- 핵심과제 ① 화학재를 덜 사용하는 저비용·저투입 농법, 환경친화 농업으로 전환
  - 내용1. 경종(농업)은 화학비료, 수입산 GMO성분의 유박이 포함된 유기질 비료사용의 획기적 감축
  - 내용2.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 감축을 위해서는 대체할 상품(퇴비, 액비, 톱밥과 왕겨 등과 같은 농림수산물 부산물)과의 가격경쟁력 차이를 보전하는 차액지원정책(예. 지역산 맞춤형 부숙유기질비료 지원, 기존 농자재보조사업에 품목추가 및 지원기준 변경)
  - 내용3.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 감축을 위해서는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감소화를 대체할 수 있는 퇴액비 살포노동력 및 살포장비, 퇴액비 살포를 위한 기초인프라 지원(예. 마을단위, 지역단위 공동살포노동작업단 구성 및 운영, 공동장비 지원, 받기반 및 진입로 정비 등)
  
- 핵심과제 ② 지역의 환경부하량을 감내할 수준에서의 환경친화 축산업으로 이행<sup>16)</sup>
  - 내용1. 밀집사육 및 과밀사육 등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외부불경제효과)에 적극 대처, 관련 정책·법률제도 하에서 철저한 관리감독 이행

16) 자료 : 오용준 외(2020), 제4차 충청남도종합계획(2021~2040), 미래 계획과제 공유를 위한 충남도·충남연 합동 워크숍(2020. 04. 27.~05. 08.)

주 : 위의 자료 중 농림축산업 분야 원고(저자 작성)로부터 발췌하였고 일부 수정과 보완을 거침.

- 내용2. 공장식 밀집사육 축산업에 대한 조치, 특히 기업화된 자본이 축산업에 진입하여 각종 환경문제 야기하는 것에 대한 조치, 자본주의화 되어가는 축산업을 다시 순환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단위로 조정
- 내용3. 과밀지역은 적정 가축사육두수 감축 제도 도입, 저밀도 가축사육환경 조성 프로그램 도입
- 내용4. 미래형 3無 가축방역 시스템 구축으로 건강한 축산물 생산·공급(예. 축산농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점검할 수 있는 ICT 점검 시스템 구축, 가축 살처분 시 매몰지를 조성하지 않는 친환경 사체처리 시스템 구축, 기계적 전파 차단을 위한 농장 내 차량진입 없는 가축 입·출하 시스템 구축)
- 내용5. 소비자들에게 축산물 소비방식의 변화 및 알권리캠페인 실시(예. 식단과 영양을 고려한 축산물 소비 줄이기 운동, 축산물 통소비 운동, 깨끗한 농장에서 만드는 믿을 수 있는 고기 소비, 소비자가 인정한 농장에서 출하된 고기 소비 등)

● 핵심과제 ③ 경종과 축산의 연계를 통한 충남형 유기성 자원순환농업 구축<sup>17)</sup>

- 가축분뇨해결과 친환경농업을 위한 양분관리제 도입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경종과 축산의 순환농업구조 달성하도록 함.
- 축산은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액비 자원화로 전환, 경종은 화학비료 감축과 축산의 퇴액비 자원화를 연계하여 유기성 자원순환농업 실현함(진정한 친환경농업은 유기성 물질자원이 상호 연계되어 순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달성).
- 내용1. 항생제 및 중금속 문제 해결, 안전한 성분의 사료급여, 축사환경 개선, 가축면역력 체계 등을 통해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분뇨로 배출
- 내용2. 배출된 가축분뇨는 부숙도 기준을 맞춰서 양질의 퇴비화, 양질의 액비화 과정을 거쳐서 자원화시키고 최종적으로 농지(토양)에 살포
- 내용3. 지역 내 농림산물부터 축산물까지 생산부터 최종 폐기물 단계까지 활용, 순환하는 방식으로 개편
- 내용4. 경축순환농업 시범마을 조성, 축산과 농업환경 리빙랩 운영

● 핵심과제 ④ 땅, 물, 공기 등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환경을 위한 지역단위 농업환경보전정책 확대

- 자원순환형 유기농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곧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조성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땅, 물, 공기 등 환경을 보호하는 것임.
- 도민들에게 농업과 농촌이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농업·농촌임을 강조하되

17) 자료 : 오용준 외(2020), 제4차 충청남도종합계획(2021~2040), 미래 계획과제 공유를 위한 충남도·충남연 합동 워크숍(2020. 04. 27.~05. 08.)

주 : 위의 자료 중 농림축산업 분야 원고(저자 작성)로부터 발췌하였고 일부 수정과 보완을 거침.

농업·농촌 분야 종사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생산방식으로 전환하여 질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할 의무를 지님.

- 자연환경보전을 가장 중요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로 자리매김, 충남도민들로부터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 내용1.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산업자재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미부숙된 가축분뇨 폐기물 등 투입 금지하고 양분관리제 적극 참여
- 내용2.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약 및 화학비료 등 화학재 사용 감축, 지천과 도랑 살리기, 풍부한 금강 수량을 활용하여 가뭄 상습지역의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등
- 내용3. 공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석유를 투입하는 대규모 기계사용을 감축하고 대체재 개발, 암모니아(초미세먼지 전구물질)를 줄이는 가축분뇨 관리와 가축사육두수 감축 등
- 내용4. 깨끗한 땅, 물, 공기 보전을 위한 “토질+수질+공기질 종합환경개선계획”을 통한 농업환경정책 수립
- 내용5. 환경을 고갈하고 오염시키는 농업생산과 유통에서 탈피하여 환경친화적 방식으로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으로 전환
- 내용6.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친환경인증, 국가단위가 아닌 지역단위 인증체계, 참여와 신뢰, 집단협업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마을단위 농업환경정책<sup>18)</sup> 확대
- 내용7. 농식품부에서 시행 예정인 선택형 공익 직불제, 환경부에서 시행 예정인 양분관리제에, 충남에서 시행했던 농업환경실천사업 복원, 충남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충남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 시범사업을 본 사업화 등

---

18) 자료 : 강마야(2018), 농업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충남의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방안, 전략연구 2018-29, 충남연구원.

주 : 마을단위 농업환경보전정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업목적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가능하게 하고(농업 환경의 지속성), 농업 생산자에게는 농업 경영의 안정화(경제성 확보)를 도모
- 사업성격은 협의 개념보다 광의 개념을 강조하였고 산업정책에서 지역정책 관점으로 전환 필요
- 사업내용은 집단적으로 환경보전 실천활동을 하는 조직과 단체에게 활동별 현금직접지원, 단, 이들의 활동은 농업생산활동에 기반을 두는 전제조건
- 실행 및 관리 주체로서 지역 내 생산자 조직 및 단체가 되고 이들 생산자 조직별 유급 생산관리자를 배치, 공간범위로는 지역 내 환경 보전이 필요한 최소 구역·단위·지구 중심(예. 수계, 유역, 호소)으로 하되 공간 선정 시 각종 데이터 지표를 응용·연계하여 과학적인 방법 적용

## 2-5. 충남 농촌거주 사회적 취약계층 통합돌봄 정책<sup>19)</sup>

- 핵심문제는 농촌지역 복지사각지대, 사회적 안전망 미흡, 단편적 복지사업 실행
  - 충남 농촌 노인자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심리적 치료가 시급한 지역
  - 과소마을 중심으로 농촌인구 감소, 고령노인, 독거노인 증가, 농촌 복지사각지대 발생
  - 기초인프라 자체가 부족하므로 자연스럽게 사회적 안전망도 미흡한 편
  - 부서별, 분야별 복지사업은 많으나 단편적으로, 파편적으로, 중복적으로 사업 실행
  
- 핵심방향은 지역수요 맞춤형 돌봄, 거버넌스형 통합 돌봄, 소통하는 주체로서 역할 부여
  - 다양한 측면에서 취약한 환경에 직면해 있는 농촌지역의 복지문제와 관련하여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혜적인 돌봄 정책에서 나아가 농촌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밀접히 결합한 형태의 지역 수요 맞춤형 돌봄 정책이 필요함.
  -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버넌스형 통합돌봄 정책이 필요함.
  - 지역사회 단위에서 실천 가능한 돌봄 정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와 소통함으로써 ‘수혜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역할을 찾아가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회복(resilience)에 기여할 수 있음.
  - 지역 단위에서 실천 가능한 복지 정책을 통해서 특정계층의 수혜적 돌봄에서 마을공동체 돌봄과 포용의 관점으로 변화가 필요함. 농촌지역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공공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핵심과제 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 단위 돌봄을 통해 공공의 사각지대 최소화,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해가는 적극적인 지역 정책 발굴
  - 농촌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지역 단위에서 실천 가능한 다양한 복지, 돌봄 정책을 적극적으로 조성, 이를 통해 공공 영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 단위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이들 취약계층을 포용해 감으로서 진정한 복지국가 실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내용1. 지역 단위 정책 발굴을 위한 지역 돌봄 자원 조사 및 지역 단위 돌봄 거버넌스 구축
  - 내용2. 지역 자원 조사를 위한 마을 단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자원 조사 비용 지원, 활동가 지원 등

19) 자료 : 강마야,김기홍(2020), 코로나19 관련 농업·농촌 분야 긴급지원대책 추가의견, 충청남도 제출자료 (2020.04.03.).

● 핵심과제 ② 농촌거주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 개발 및 연계

- 농촌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먹거리 접근성 강화 및 취약계층 돌봄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다양한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개발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게는 돌봄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는 새로운 농촌형 일자리 창출 모델로서 정착 가능함.
- 내용1. (통합) 통합돌봄프로그램 구성 및 아이디어 공모, 통합돌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각 담당부국 및 지역보장협의체, 주민자치회 등 포함)
- 내용2. (지원) 통합돌봄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지원, 먹거리 지원 서비스와 연계한 찾아가는 방문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구축, 관련 인력 교육 및 인건비 지원, 지역의 다양한 중간지원조직 활용 방안 모색 및 지원
- 내용3. (체계) 농림축산국 중심으로 복지부서, 교육부서, 문화부서 등 참여
- 내용4. (먹거리+의료 및 보건) 정기적으로 독거노인, 치매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양질의 반찬 형태 음식 배달 및 꾸러미 농산물 지원(먹거리)+건강 체크 및 공공 의료서비스 연계 지원(적십자회, 보건소)
- 내용5. (자녀) 아동 및 청소년 독서지도, 방과후 심리상담(교육, 문화)+농번기 여성농업인 자녀 돌봄 지원(농업)
- 내용6. (정신건강) 농촌 거주민 대상 정기적 정신건강 및 우울증 상담(보건소)

● 핵심과제 ③ 지역 단위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도우미 인력체계 구성

- 내용1. 농촌의 다양한 돌봄을 위해 지역의 노인 및 실업인력, 다양한 경력을 가진 귀농 귀촌인, 청년 등을 활용하여 배치하고 지원하는 사업 실시
- 내용2. 지역 인력을 활용하여 농번기 여성농업인 자녀 돌봄이나 방과후 교육 및 문화 관련 지원, 반찬 및 꾸러미 배달,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등의 지역 도우미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농업 외 소득활동 감소에 따른 실업인력을 대체하는 방안
- 내용3. 돌봄 도우미 어플 등 마련으로 적재적소에 활용 가능한 플랫폼 지원, 돌봄 도우미 대상 교육 실시, 돌봄 도우미 인건비 지원

● 핵심과제 ④ 농촌 지역의 자원인 농업생산활동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교육과 돌봄, 일자리 창출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과 연계 플랫폼 및 서비스 구축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농업은 농업생산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교육, 돌봄, 일자리 창출을 제공하고 있고 농촌 지역의 강력한 복지 정책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음.
- 2020년에는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육성 시범사업’이 시행되어 지역 네트워크

를 통한 지역 단위 사회적 농업 실천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어 지역 단위의 복지, 돌봄 정책이 이러한 사회적 농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필요함.

- 내용1. 읍면 단위 지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회적 농업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충남형 사회적 농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시군 단위의 지원 플랫폼 구축
- 내용2. 사회적 농업을 통한 생산물을 취약계층 서비스 업체에 우선 구매하고 연계하는 플랫폼 구축 지원, 쿠폰 등 지원
- 내용3.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 내 사회적 농업 실천 농장 참여 지원
- 내용4. 사회적 농업 실천 농장의 보조 인력으로서 참여가능한 풀 조성

● 핵심과제 ⑤ 행정구역 경계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광역돌봄체계 구성

- 기존에 행정구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행정구역에서 물리적으로 가장 먼 경계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 단위를 넘어서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광역 단위의 돌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시군 단위의 협동 체계(예시. 장곡(홍성군)·비봉·화성(청양군) 연합 돌봄) 및 충남도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 내용1. 경계지역 시군 간 협의를 바탕으로 의료 및 보건(보건소 등), 재난 및 안전(119 안전센터 등), 농업 및 농촌(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등)과 관련한 다양한 돌봄 지원을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한 광역 단위의 돌봄체계를 구상 및 전담 인력 구성 배치
- 내용2. 시군 단위의 보건소나 119안전센터는 물론 읍면 단위의 농업, 농촌과 관련한 다양한 기관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시군 차원의 지원 및 충남도의 재정 및 인력 지원, 이를 통해 경계지역 거점 돌봄 기관 설치(노인회관 등 활용) 및 이동식 행복트럭(가칭)을 통한 거점 돌봄 기능 부여

### 3. 요약 및 시사점

● 새로운 접근관점으로의 변화 도모

- 일시적, 한시적 긴급대책이 아닌 새로운 정상(New Normal)을 향한 농정 전환과 사람 중심 관점으로, 돌봄과 포용 관점으로, 환경과 생태의 관점으로 농정 변화 필요함.
- 먹거리 선순환, 농업인력, 소득 및 경영안정, 환경친화, 통합돌봄 등 대응방향 도출함.

● 5대 대응방향(정책)별 핵심문제에 따른 핵심방향, 핵심과제 제안, 이제 전환 필요 (<표 4-1> 참고)

- 충남 지역먹거리 선순환구축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 민관협치 및 컨트롤타워 구성과 운영, 조직 및 예산 등 각종 기반 조성, 생산자 및 시민조직 양성 등 과제추진 필요함.
- 충남 농업·농촌 사람과 인력 해결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 농업인력에 대한 불편한 진실 공론화, 농업노동의 소중함에 대한 인정과 배려, 3D 농작업의 ICT 기술 적용과 기술 개발 투자, 농업인력 중장기 계획 수립 등 과제추진 필요함.
- 충남 농산물 유통가격·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위해서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의 가격안정제, 유통 및 가공 등 판로 확보를 위한 다각화,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 등 과제추진 필요함.
- 충남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 이행하는 정책을 위해서 저비용·저투입 농법 전환, 환경친화 농축산업 이행, 지역단위 농업환경보전정책 확대 등 과제추진 필요함.
- 충남 농촌거주 사회적 취약계층 통합돌봄 정책을 위해서 지역수요 맞춤형 돌봄, 거버넌스형 통합 돌봄, 소통하는 주체로서 역할 부여 등 과제추진 필요함.

<표 4-1> 5대 대응방향(정책) 핵심내용 요약

대응방향(정책)	핵심문제	핵심방향	핵심과제
충남 지역먹거리 선순환구축을 위한 정책	민관협치 운영 미흡	민관협치 및 컨트롤타워 구성과 운영	① 충남 도민들로부터 내외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 ② 충남 먹거리 정책추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민관협치 등 조직 정비
	조직 및 예산 등 각종 기반 부족	조직 및 예산 등 각종 기반 조성	③ 충남 먹거리 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기존 사업과의 통합, 연계를 통한 예산 확보
	조직화된 생산자 및 시민 부족	생산자 및 시민조직 양성	④ 충남 내 다양한 먹거리 생산기반을 통한 균형적인 품목자급률 달성, 생산자조직 및 소비자조직 기반 강화 ⑤ 충남 지역먹거리 꾸러미사업 정례화, 온라인 플랫폼 구축 ⑥ 조직 및 예산 등 기반이 완성된 이후 수요에 맞는 물적 기반 추진

대응방향(정책)	핵심문제	핵심방향	핵심과제
충남 농업농촌 사람과 인력 해결을 위한 정책	농업노동력 부족	농업인력에 대한 불편한 진실 공론화	① (임시방편 대책) 농작업지원단 지원사업 확대 및 농업인력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차액 지원
	고용노임비용 증가가 경영부담으로 연계	농업노동의 소중함에 대한 인정과 배려	② 3D 농작업의 ICT 기술 적용, 자동화 및 기계화 개발 투자, 저렴한 수준의 보급형 기술개발과 상용화
	열악한 농업노동환경	3D 농작업의 ICT 기술 적용과 기술개발 투자	③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확대,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농업 이행, 창농교육기관 기능, 중간코디네이터 양성
	농업인력 수급실태 미파악	농업인력 중장기 계획 수립	④ 충남 농업인력 수급 실태조사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농업인력 양성과 확보 계획 부재		
충남 농산물 유통가격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	저평가된 농산물 가격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의 가격안정제	① 농산물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의 가격안정제 도입
	경영비 상승	유통 및 가공 등 판로 확보를 위한 다변화	② 유통가공소비까지 고려한 판로 확보 다변화
	농업소득 정체 혹은 하락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	③ 기존 시장가격 왜곡하는 보조사업을 직접 소득 지원 사업으로 개편 ④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기초실태조사, 정교한 소득 및 경영안정대책 수립
충남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 이행하는 정책	고비용·고투입 농법	저비용·저투입 농법 전환	① 화학재를 덜 사용하는 저비용·저투입 농법, 환경친화 농업으로 전환
	생산성 향상 농법	환경친화 농축산업 이행	② 지역의 환경부하량을 감내할 수준에서의 환경친화 축산업으로 이행
	환경 중요성 인식 미흡	지역단위 농업환경보전정책 확대	③ 경종과 축산의 연계를 통한 충남형 유기성 자원순환농업 구축 ④ 땅, 물, 공기 등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환경을 위한 지역단위 농업환경보전정책 확대
충남 농촌거주 사회적 취약계층 통합돌봄 정책	농촌지역 복지사각지대	지역수요 맞춤형 돌봄	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 단위 돌봄을 통해 공공의 사각지대 최소화,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기는 적극적인 지역 정책 발굴
	사회적 안전망 미흡	거버넌스형 통합 돌봄	② 농촌거주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 개발 및 연계 ③ 지역 단위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도우미 인력체계 구성
	단편적 복지사업 실행	소통하는 주체로서 역할 부여	④ 농촌 지역의 자원인 농업생산활동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교육과 돌봄, 일자리 창출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과 연계 플랫폼 및 서비스 구축 ⑤ 행정구역 경계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광역돌봄체계 구성

주 : 저자 작성함.

# 05

## 충청남도 농정 추진기반 혁신<sup>20)</sup>

### 1. 혁신의 틀

- 충남 농정체계 혁신을 위한 관점 : 환경과 사람(선순환, 인권, 생태 등)
  -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실행하는 것보다 기존 정책과 사업, 조직과 인력, 예산, 각종 정보들을 기초단계부터 재점검하는 것이 중요함.
  - 그리고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충남 농정의 방향과 관점은 “환경과 사람”을 향하되 키워드는 “선순환, 인권, 생태”여야 함.
  - 농업·농촌 분야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 인구가 점차 줄어들어서 소멸 지경에 이르렀다”와 같은 걱정 소리만 가득하고 인구대책을 세우기 급급한 현실임. 농촌에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떠나 가게 하지 않는,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함. 그리고 그것의 키워드는 “사람이 다시 중심이 되는 세상”이 되어야 함.
  
- 충남 농정체계 4대 혁신(틀) 제안
  - 충남 농정의 방향과 관점을 실행하기 위해서 농정체계 4대 혁신(틀)은 농정조직의 혁신, 농정예산의 혁신, 농정정보의 혁신, 농정주체 인식의 혁신이 필요함.
  
- 충남 농정체계 4대 혁신 추진과제
  - 농정조직의 혁신을 위해서 다양한 인사제도 적극 활용 등을 제안함.
  - 농정예산의 혁신을 위해서 소모성 및 생산성 향상 보조사업 일몰, 축소, 폐지 등을 제안함.
  - 농정정보의 혁신을 위해서 농업·농촌 행정정보 통합DB 구축 등을 제안함.
  - 농정주체 인식의 혁신을 위해서 뿌리깊은 패배의식 극복, 자존감 회복 등을 제안함.

20) 자료 : 강마야(2020), 농정 구조개편, 미래 농정혁신, 2020 충남 미래농정포럼 토론회(2020.02.23.).

## 2. 세부내용

### ● ① 농정조직 혁신을 위한 추진과제<sup>21)</sup>

- 직위공모제(읍면동장 주민추천제도 등), 필수보직기간(전보 제한기간), 전문직위제, 임기제공무원 제도 등 전문성 강화 및 순환보직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공무원 인사제도 적극 활용
- 단, 농정체계 혁신에 기여한 경우(팀 단위로 진행) 성과보상체계와 인사고과 반영 등 인센티브 부여가 중요한 전제조건(즉, 인사고과와 사업성과 일치화하는 구조)
- 불필요한 업무 축소하고 마을현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행정 구현
- 마을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고 사람과 환경·생태가 공존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위해서 농업영역과 농촌영역 정책 결합(융복합)
- 농정관련 부서 및 기관 등 조직진단을 통해서 중복 및 유사사업 수행하는 경우 업무와 기능 통합, 혹은 신규 기능 부여 등 행정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재편

### ● ② 농정예산 혁신을 위한 추진과제

- 2019 회계연도 본예산 기준으로 농림축산분야 세출예산 내역사업은 1,498개 사업, 8,737억 원
- 제안하는 농림축산분야 세출예산사업 구조조정 방안은“개인책임 영역, 시장책임 영역, 공공책임 영역”등으로 모든 사업을 구분하여 일몰, 축소, 폐지, 유지, 확대 사업 도출
- 대신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과 사업에 예산의 집중적인 투입
- 즉, 현물성 지원, 하드웨어성 지원, 소모성 자재 지원은 점차 축소, 대신 사람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 사람을 양성하는 지원, 환경 및 생태 등 공익 기능 향상을 유도하는 지원은 점차 확대
- 단일 개별사업 방식이 아닌 연관있는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서 사업 내에서 주체의 자율성을 부과하는 프로그램 방식으로 확대

### ● ③ 농정정보 혁신을 위한 추진과제

- 지방비 보조사업을 우선 대상으로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선정과정의 공정성,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 분배정의 및 형평성 실현 등의 관점)
- 보조사업 대상자 및 대상지를 중심으로 한 행정과 민간의 공동 전수실태조사 실시
- 농업과 농촌 관련한 기존 행정자료, 통계자료, 보조사업 집행자료, 전수실태조사결과

21) 자료 : 구자인(2020), 불편한 진실, 공무원 순환보직제, 한국농어민신문 오피니언 농업마당(2020.01.14.)  
(출처 :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4162>, 검색일자 : 2020.05.10.)

## 등 통합 DB 구축, 신규 정책설계 시 적극 활용

### ●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축사농장의 생산, 환경, 정보 혁신

- 농축산업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외부불경제효과(토질, 수질, 대기질 환경오염, 악취 등)를 극복할 종합환경정보 체계 구축
- 농업 생산과정에서 화학비료 과다 사용, 물 사용 등은 탄소배출 증가, 기후위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
- 축산업 생산과정에서 가축분뇨 과다 발생, 암모니아 발생은 2차 미세먼지 전구생성물질로 지목되는 등 기후위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
- 농업과 축산업은 먹거리 공급이라는 공익적 기능 외에도 부정적 기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생산방식 변화도 중요, 기술혁신을 접목한 변화도 중요
- 농축산업 분야의 수질-토양-대기환경 종합모니터링, 정보수집, 정보공유, 정보확산 체계 구축, 이런 정보를 토대로 공익형 직불제 시행과 맞물려 진행,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등과도 연계 진행

자료 : 오용준 외(2020), 제4차 충청남도종합계획(2021~2040), 미래 계획과제 공유를 위한 충남도·충남연 합동 워크숍 (2020. 04. 27.~05. 08.)

주 : 위의 자료 중 농림축산업 분야 원고(저자 작성)로부터 발췌하였고 일부 수정과 보완을 거침.

### ● ④ 농정주체인식 혁신을 위한 추진과제

- 농정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현장지향 행정 구현, 농정예산과 보조사업의 재편, 농정정보의 과학화를 통해서 행정신뢰 극복
- 대규모 사업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으로서, 다양한 실험과 시범사업 프로젝트 통해서 성과 확산, 시행착오도 중요한 경험으로 인정
- 패배의식을 극복, 민관 협치구조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현장 농민도 협업 및 연대하는 힘, 역량과 경험 축적하는 노력 필요
-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남게 하는 것이 중요”기준으로 정책과 사업의 최종 성과지표 변경
- 행정의 변화를 요구함과 동시에 현장 주체의 변화도 도모해야 함. 즉,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수행
-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농정 관련 주체와 이해관계자 간 인식이 새롭게 전환되는 계기 마련

● 예시 : 4대 혁신과제는 별개 수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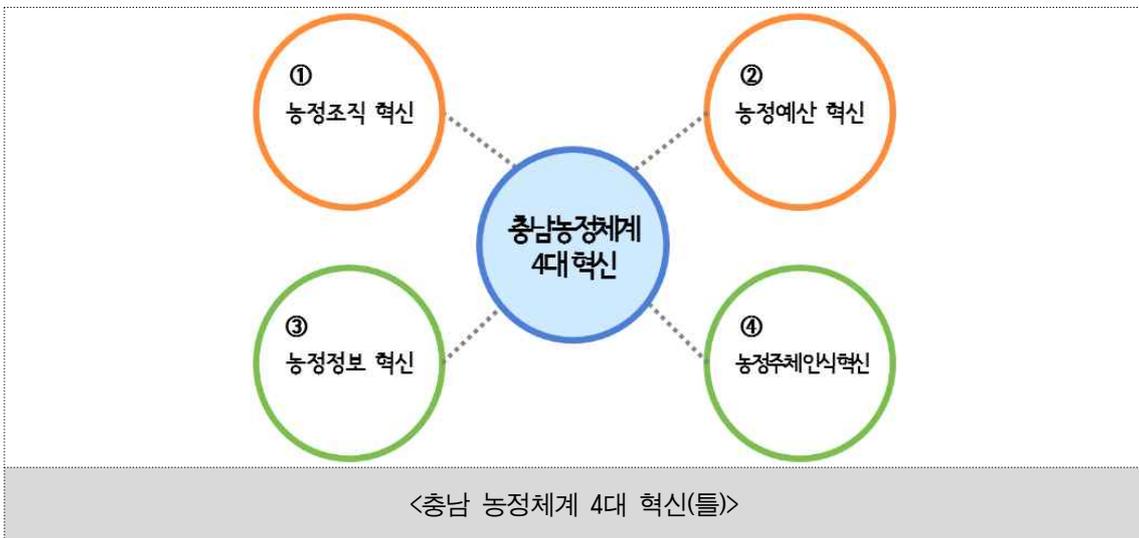
기존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전수실태조사 → 농정관련 부서 및 기관 등 조직진단 실시 → 농정예산 및 보조사업 재편, 조직의 업무 및 기능 재편과 보강 → 각종 농정관련 정보 DB구축 → 행정전문성 강화 → 좀 더 과학적인 농정 설계 →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시범사업 발굴 → 모니터링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책 보완 → 농정주체들의 신뢰 극복 등 인식전환 계기

주 : 저자 작성함.

### 3. 요약 및 시사점

● 충청남도 농정 추진기반 혁신을 위한 준비 필요(〈그림 5-1〉 참고)

- 충남 농정의 방향과 관점을 실행하기 위해서 농정체계 4대 혁신(들)은 농정조직의 혁신, 농정예산의 혁신, 농정정보의 혁신, 농정주체 인식의 혁신이 필요함.
- ① 농정조직의 혁신을 위해서 다양한 인사제도 적극 활용 등을, ② 농정예산의 혁신을 위해서 소모성 및 생산성 향상 보조사업 일몰, 축소, 폐지 등을, ③ 농정정보의 혁신을 위해서 농업·농촌 행정정보 통합DB 구축 등을, ④ 농정주체 인식의 혁신을 위해서 뿌리깊은 패배의식 극복, 자존감 회복 등을 제안함.



4대 혁신	추진과제
① 농정조직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인사제도 적극 활용(임기제공무원, 전문직위제 등)</li> <li>■ 농정혁신에 기여한 팀에게 성과보상체계, 인사고과 반영</li> <li>■ 불필요한 업무 축소, 마을현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행정</li> <li>■ 농정관련 부서 및 기관 등 조직진단</li> <li>■ 업무와 역할 및 기능 재편, 행정인력 전문성 강화로 재편</li> </ul>
② 농정예산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모성 보조사업, 생산성 향상 중심 보조사업 일몰, 축소, 폐지</li> <li>■ 공익 기능을 제고하는 프로그램 방식의 사업 확대</li> <li>■ 현물지원, H/W지원보다 사람에게 현금지원, S/W지원 강화</li> </ul>

<p>③ 농정정보 혁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농촌 행정정보 통합DB 구축</li> <li>■ 농업·농촌 지방비 보조사업 통계DB 구축</li> <li>■ 기존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전수실태조사</li> <li>■ 통계와 정보에 바탕을 둔 과학적인, 신뢰받는 농정 설계</li> </ul>
<p>④ 농정주체인식혁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뿌리깊은 패배의식 극복, 자존감 회복</li> <li>■ 행정에 대한 불신 극복</li> <li>■ 민관 협치구조 작동을 위한 협업·연대 역량과 경험 축적</li> <li>■ 농업생산성 중심의 사고에서 사람 중심의 인식 전환</li> </ul>

〈그림 5-1〉 충남 농정체계 4대 혁신(틀)과 추진과제

주 : 저자 작성함.

## 06 결론

### 1. 요약

#### ● (제2장)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 대응현황

-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로 수출진흥, 친환경농업, 재해보험정책, 농업금융정책 등의 영역에서 긴급대책을 마련, 충청남도는 농업분야 방역대책, 농업분야 피해대책, 수출 및 용자 지원, 특별지원 대책 등의 영역에서 긴급대책을 마련하였음.
-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19를 고려한다면, 현재까지는 근본적 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일시적, 한시적인 긴급지원 중심의 대책수준임.
- 그동안 외면했던 농정개혁의 요구와 함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새로운 접근관점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기에 현재와 같은 임시방편 수준의 긴급지원대책은 한계가 있음. 즉, 포스트 코로나19에 있어서 농업·농촌 분야도 새로운 변화 요구에 맞는 근본적인 대응방향 도출이 필요함.

#### ● (제3장) 충남도민패널을 통한 심층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변화에 대한 열망 감지

- 충남 지역먹거리 선순환구축, 농업·농촌 사람과 인력 해결, 농산물 유통·가격·소득 및 경영안정,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 이행, 농촌거주 사회적 취약계층 통합돌봄 등 5대 실행전략(정책)을 “지속가능하게, 적극적인 방식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이 중에서 도민들은 충남 및 시군 농정이 가장 근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농산물 유통, 가격을 비롯하여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과 “충남 지역먹거리 선순환구축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 이를 위해서 농정이 핵심적으로 변해야 할 것은 지속가능한 농정 정책으로 변화, 과감한 행정 혁신 지향, 사회적 약자(소농) 보호 및 생활안정 지향, 민관 거버넌스 확대,

유통채널 다양화 및 스마트화기술 연계, 환경친화적 생산방식으로 변화, 기존 사업기준과 방식의 재점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교류와 자원 순환 순으로 나타남.

● (제4장) 새로운 접근관점으로의 변화 도모, 5대 대응방향(정책)중심으로 전환 필요

- 일시적, 한시적 긴급대책이 아닌 새로운 정상(New Normal)을 향한 농정 전환과 사람 중심 관점으로, 돌봄과 포용 관점으로, 환경과 생태의 관점으로 농정 변화 필요함.
- 먹거리 선순환, 농업인력, 소득 및 경영안정, 환경친화, 통합돌봄 등 대응방향 도출함.
- 충남 지역먹거리 선순환구축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 민관협치 및 컨트롤타워 구성과 운영, 조직 및 예산 등 각종 기반 조성, 생산자 및 시민조직 양성 등 과제추진 필요함.
- 충남 농업·농촌 사람과 인력 해결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 농업인력에 대한 불편한 진실 공론화, 농업노동의 소중함에 대한 인정과 배려, 3D 농작업의 ICT 기술 적용과 기술 개발 투자, 농업인력 증장기 계획 수립 등 과제추진 필요함.
- 충남 농산물 유통가격·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위해서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의 가격안정제, 유통 및 가공 등 판로 확보를 위한 다각화,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 등 과제추진 필요함.
- 충남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 이행하는 정책을 위해서 저비용·저투입 농법 전환, 환경친화 농축산업 이행, 지역단위 농업환경보전정책 확대 등 과제추진 필요함.
- 충남 농촌거주 사회적 취약계층 통합돌봄 정책을 위해서 지역수요 맞춤형 돌봄, 거버넌스형 통합 돌봄, 소통하는 주체로서 역할 부여 등 과제추진 필요함.

● (제5장) 충청남도 농정 추진기반 혁신을 위한 준비 필요

- 충남 농정의 방향과 관점을 실행하기 위해서 농정체계 4대 혁신(틀)은 농정조직의 혁신, 농정예산의 혁신, 농정정보의 혁신, 농정주체 인식의 혁신이 필요함.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음.
- ① 농정조직의 혁신을 위해서 다양한 인사제도 적극 활용 등을, ② 농정예산의 혁신을 위해서 소모성 및 생산성 향상 보조사업 일몰, 축소, 폐지 등을, ③ 농정정보의 혁신을 위해서 농업·농촌 행정정보 통합DB 구축 등을, ④ 농정주체 인식의 혁신을 위해서 뿌리깊은 패배의식 극복, 자존감 회복 등을 제안함.

## 2. 시사점

### ●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일상의 변화, 농업·농촌 분야의 변화

-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다시금 되짚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은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전환시기, 근본적으로 사회시스템 재점검 시기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새로운 정상), 뉴딜(새로운 계약)은 인간 존재의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면서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노동을 보호하는 것이야 함.<sup>22)</sup> 농업 노동 또한 이러한 맥락과 동일하게 작동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19 이후 사회는 불평등을 극복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고 농업도 예외일 수 없음.
- 코로나19를 계기로 농업·농촌 분야는 도민들에게 먹거리 생산이라는 공공재로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중요성을 환기시켰고 식량자급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불러일으켰음.
- 그동안 피해자 입장, 수동적 입장, 보조적 입장에 머물던 농업·농촌 분야는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만한 충분한 존재로 재조명받고 있고 정체성 복원의 계기가 되고 있음.

### ● 그동안 미뤄왔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재점검하는 시기

- 농업인력 문제, 농업소득 문제, 자원순환이 깨진 구조 문제, 자본주의 산업의 병폐로 인한 농촌 자연환경의 오염·고갈 문제,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했거나 알아도 모른 척 지나갔던 불편한 진실이었기에 과감하게 실행하지 못했던 의제들임.
- 새로운 정상으로의 진입, 한국형 뉴딜과 같은 사회협약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러 의제들을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재점검하고 추진하려는 의지를 발휘하며 추진동력에 시동을 걸어야 할 것임.

### ● 핵심은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민관협치, 환경을 고려한 농업, 사람을 고려한 농정 등을 구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대에 초점

- 좋은 사회는 좋은 시민들이 좋은 공공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므로 그 과정에서 협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함. 다만, 이번 연구의 한계는 지역 차원에서의 이 모든 것을 누가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주체, 체계, 민관협치는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았고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둬(민관협치).

22) 자료 : 김명희(2020), 김명희의 건강정치노트 : 탈근대 사회의 전근대적 노동환경, 시사IN 제266호, p.110.

- 농업노동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함. 이제 우리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야 함. 저렴한 농산물 가격은 누군가 노동의 희생과 댓가, 열악한 노동환경을 전제로 얻어진 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지금까지의 방식이 어땠는지 돌아보고 전환이 필요한 것은 실행할 때임(사람을 고려한 농정).
-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는 농업은 점차 도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임(그린 뉴딜/환경을 고려한 농업).
- 농업분야의 정보와 기술방향은 탄소에너지를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효율성을 기하는 방식으로, 혁신적으로 개발되어야 함. 이 과정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은 중요하고 궁극적으로 탄소배출 정보와 연결되어야 함(디지털 뉴딜/환경을 고려한 농업).<sup>23)</sup>

●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의 농정전환을 위한 대응방향과 세부정책 추진 가속화 필요**

- 충남 지역먹거리 선순환구축, 농업·농촌 사람과 인력 해결, 농산물 유통·가격·소득 및 경영안정,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 이행, 농촌거주 사회적 취약계층 통합돌봄 등 5대 실행전략이자 대응방향을 도출함.
- 전체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 농민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경영안정 수단을 총동원해서 농업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일,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 이행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 통합돌봄을 통해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과 사업으로 개편하는 것임.
- 쌀 및 특화작목에 편중되어 있는 단작화된 생산구조로부터 탈피하여 재배품목의 다양화 등 다양한 먹거리(맥류, 두류, 서류, 잡곡류, 특용작물류)를 생산하는 구조로 전환 가속화해야 함. 이는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 방식으로의 전환도 동시에 진행해야 하고 이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 등 환경과 생태계 보전, 균형적인 먹거리자급률 달성,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 생산비, 경영비, 가격, 유통, 농업인력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함. 이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기반 구축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 지역 단위에서 실천 가능한 다양한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은 지역의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달성 및 공동체 활성화 기여, 특히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를 기반으로 이와 연계한 의료, 보건 서비스의 확대 등을 지역의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이 함께 구상하고 만들어가는 통합돌봄서비스 마련할 수 있음.

23) 자료 : 정태인(2020), 시사에세이 : 그린 뉴딜, 문제는 정치다, 시사IN 제663호, pp.173-175.

### <국내 문헌>

- 강마야(2020), 농정 구조개편, 미래 농정혁신, 2020 충남 미래농정포럼 토론회(2020.02.23.).
- 강마야, 김기홍(2020), 코로나19 관련 농업·농촌 분야 긴급지원대책 추가의견, 충청남도 제출자료 (2020.04.03.).
- 강마야(2018), 농업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충남의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방안, 전략연구 2018-29, 충남연구원.
- 강마야(2019),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방안 연구 : 충청남도 지역먹거리 전략, 2019년도 전국 시도 연구원협의회 공동연구 최종보고서.
- 강마야(2019), 충남 농림축산분야 예산사업 재정혁신 평가기준 및 분석, 현안과제연구, 충남연구원.
- 김명희(2020), 김명희의 건강정치노트 : 탈근대 사회의 전근대적 노동환경, 시사IN 제266호, p.110.
- 구자인(2020), 불편한 진실, 공무원 순환보직제, 한국농어민신문 오피니언 농업마당(2020.01.14.)
- 오용준 외(2020), 제4차 충청남도종합계획(2021~2040), 미래 계획과제 공유를 위한 충청남도·충남연 합동 워크숍(2020. 04. 27.~05. 08.)
- 이정민, 우성휘, 이명기, 박혜진(2019), 2019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KREI 농정포커스 제185 호(2019.12.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태인(2020), 시사에세이 : 그린 뉴딜, 문제는 정치다, 시사IN 제663호, pp.173-175.
-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코로나19대응 연구추진단(2020), 코로나19 대응 시리즈 : “Bounce-Back 충남”을 위한 분야별 대응방안 모색, 충남리포트 제353호, 충남연구원.
- 충청남도 농림축산국(2020), 코로나19관련 농업농촌분야 긴급지원대책, 내부자료(2020.03.19.).
- 충청남도(2019), 2020 농작업 지원단 육성운영 사업계획.
- 충청남도(2020), Post 코로나19 대응 제3차 비상경제상황 점검회의(2020.05.07.)

### <보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02.26.), 코로나19 대응, 농식품 수출 총력 지원 : 원료구매자금(3,680억원, 금리 0.5%p 인하), 판촉·마케팅(123.8억원) 긴급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2020.03.05.),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농식품분야 재정지원 확대 : ‘20년 추가경정 예산안 이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83억원 추가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2020.03.09.), 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2020.03.17.), 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대상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 융자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2020.03.30.), 농림축산식품부, 농번기 인력 수급 지원 방안 마련 : 계절근로자 대체 인력 지원, 농협 인력중개 확대(30개소 추가)등 적극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2020.04.01.),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 농번기

(4~7월) 동안 농기계 임대료 일 5천 원~105천 원 인하.

농림축산식품부(2020.04.13.), 농식품부, 코로나19로 판로 잃은 친환경농가를 돕는 ‘착한 소비’적극 지원 : 6주간 피해 물량의 96%인 1,164톤 판매 지원.

농림축산식품부(2020.04.17.), 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농가 정책자금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2020.04.23.), 농식품 수출, 이젠 비대면 마케팅으로 기회 잡는다. : 한류연계 온라인콘서트, 동영상 마케팅, 왕홍 등 파워인플루언서 활용.

농림축산식품부(2020.04.29.), 내리지 마세요! 차안에서 바로사세요(바로마켓) : 4.29일부터 경마공원 바로마켓 승차구매형(드라이브 스루) 장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2020.05.06.),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대 : 예비창업 50명, 창업기업 300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2020.05.07.), 농림축산식품부, 농번기 농촌 “일손돕기” 본격 시동 : 모든 농작업은 「코로나19 행동 수칙」 등 방역지침 준수.

농림축산식품부(2020.05.12.), 농식품 분야 기업·국민의 애로사항을 적극행정으로 해결 :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애로사항, 적극행정으로 답을 찾다.

농림축산식품부(2020.05.19.),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 추가 확보·지원 : 2020년도 시범사업 확대(4.5만명 → 8만명) 예산(45억 원) 국무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2020.05.25.), 도시 구직자와 구인농가 연결 「도시-농촌 인력중개 시스템」 구축 : 5월 25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농업 단기근로 중개 서비스 개시.

농림축산식품부(2020.05.25.), 코로나19 위기, 기능성식품 수출에서 길을 찾다 : 민·관 합동 기능성식품 수출지원단 구성, 일본·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인삼 등의 과학적 근거 구축 추진.

환경부(2020.05.13.), 코로나19 이후 시대 대비, 녹색전환 전략 모색.

#### <홈페이지>

한국농어민신문(2020). 불편한 진실, 공무원 순환보직제.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4162>, 검색일자 : 2020.05.10.)

· 한국농정신문(2020). 농촌 인력부족, 정부의 책임이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0829>, 검색일자 : 2020.05.10.)

· 한국농정신문(2020). 간데없는 농촌 인력, 농번기 어찌하나.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0833>, 검색일자 : 2020.05.10.)

· NAVER DataLab(검색일자 : 2020.05.01.)  
[https://datalab.naver.com/keyword/trendResult.naver?hashKey=N\\_6d0f37239efe09fd1c7a50cdd0e6e652](https://datalab.naver.com/keyword/trendResult.naver?hashKey=N_6d0f37239efe09fd1c7a50cdd0e6e652))

〈심층 설문조사지〉

참여분과명	작성자명
코로나19에 따른 농업·농촌 분야 접근관점의 변화와 대응방향 - 심층 설문조사(객관식+주관식) -	

충남연구원에서는 자체 현안과제로서 “코로나19에 따른 농업·농촌분야 접근관점의 변화와 대응방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응방향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농업·농촌 정책의 전환을 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충청남도 도민참여단으로부터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원활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04. 27.

★ 회신처/문의사항 :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강마야 연구위원(041-840-1210, kmaya@cni.re.kr)  
이도경 연구위원(041-840-1185, lg6678@cni.re.kr)

1.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충남 내 기회와 위기에 놓인 직종(직업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3개 순위까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예시와 같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구분	농림어업 관련직 (식품가공, 물류 포함)	서비스 등 자영업 관련직(외식 업,관광업)	영업 및 판매 관련직	문화,예술, 디자인방송 관련직	건설,기계, 재료,화학, 섬유,전기전 자,통신 관련직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그 외 특수고용직 , 계약직, 일용직 등
1-1. 기회	1순위		3순위			2순위	
1-2. 위기		1순위	2순위	3순위			

2.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충남의 농업·농촌 분야가 처한 어려운 상황 혹은 희망적인 사항들에 대한 현상, 이미지들을 최소 3개 이상 적

어주시기 바랍니다(예시와 같이).

2-1. 긍정 현상, 이미지 (기회, 희망의 단어)	예. 식품안전성 관심 고조, 식량안보 중요성, 먹거리 중요성 등
2-2. 부정 현상, 이미지 (위기, 절망의 단어)	예. 가축질병 및 전염병, 환경오염 악화, 농업인력부족, 생산비 증가 등

3.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충남 농업·농촌의 현재와 미래 중요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시게 되었습니까?(1개만 표시)

①	②	③	④	⑤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중요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것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덜 중요해질 것	모름. 상관없음.

4. 충남 농업·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공익적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개만 표시)

①	②	③	④	⑤
식량(농식품, 먹거리)을 안정적으로 공급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문화 계승, 보존과 여가 향유에 기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	자연환경, 경관보전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5.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충남 및 시군 농정이 가장 근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1개만 표시)

①	②	③	④	⑤
충남 지역먹거리 선순환구축을 위한 정책	농업·농촌 사람과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농산물 유통, 가격을 비롯하여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 이행하는 정책	농촌거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돌봄정책

6.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충남 먹거리

를 지역 내부에서 선순환(먹거리 생산-가공-유통-소비, 판매-폐기, 먹거리 교육과 먹거리 복지 등)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개조식으로 작성, 분량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적기(제도, 법률, 개인 역할 등)

7.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충남 농업·농촌에 거주하는 사람과 농업활동을 하는 사람이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개조식으로 작성, 분량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적기(제도, 법률, 개인 역할 등)

8.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충남 농림축산물의 유통, 가격을 비롯하여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서 어떤 것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개조식으로 작성, 분량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적기(제도, 법률, 개인 역할 등)

9.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충남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개조식으로 작성, 분량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적기(제도, 법률, 개인 역할 등)

○

10.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충남 농촌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돌봄**을 위해서 어떤 것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사회적 취약계층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약물중독자, 미혼모, 범죄피해 가족,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 주민, 저소득층)을 비롯하여 사회적농업의 범주에 있는 아동, 청소년, 여성, 귀농귀촌 희망자 등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개조식으로 작성, 분량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적기(제도, 법률, 개인 역할 등)

- 
- 
- 
- 

11.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충남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충남도민들로부터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주체별로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개조식으로 작성, 분량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적기(제도, 법률, 개인 역할 등)

- 충청남도 및 시군 농정(행정)  
-  
-
- 생산자  
-  
-
- 일반 도민, 시민 등 소비자  
-  
-
- 관련 업계 종사자(식품유통, 식품가공 및 제조, 물류 및 운송, 식품판매 등)  
-  
-

12.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충남 및 시군 농정이 **핵심적으로 변해야 할 것**을 **최소 3개 이상** 적어주시기 바랍니다(예시와 같이).

예. 지속가능한 정책, 민관 거버넌스 확대, 행정혁신, 환경친화적인 생산 등

13.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윗부분에서 표현하지 못한 기타 의견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작성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좋은 연구로 보답하겠습니다. -